

2007.3

참여정부 주요 통계



참여정부 주요 통계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 참여정부 성과

1. 경 제	6
2. 사 회	9
3. 통일 · 외교 · 안보	14
4. 정치 · 일반행정	16

II 주요 국정현안

1. 한미 FTA	20
2. 부동산 대책	22
3. 비전 2030	25
4. 양극화	28
5. 저출산 · 고령화	30
6. 「2+5」전략	32
7. 일자리 창출	34
8. 비정규직 대책	35

Contents



Ⅲ 분야별 주요 통계

[경제 분야]

1. 경제 일반	38
(1) 주요 경제지표 / 38	(2) 환율 동향 / 39
(3) 국제수지 동향 / 40	(4) 수출입 동향 / 41
2. 재정 일반	42
(1) 주요 재정지표 / 42	(2) 2007년 예산 개요 / 43
(3) 조세 / 44	(4) 국가채무 / 45

[사회 분야]

1. 사회복지	46
2. 교육	48
3. 노동	50
4. 여성·가족	51
5. 환경	52
6. 문화·관광	52
※ 사행산업 및 사행성 게임 관련	53

[통일·외교·국방 분야]

1. 남북관계	54
2. 외교	56
3. 국방	57

[정부·일반행정 분야]

1. 정부조직 일반	58
2. 공무원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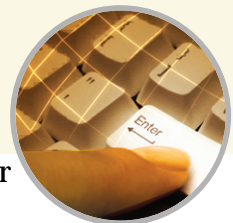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 참여정부 성과

- 1 경 제
- 2 사 회
- 3 통일 · 외교 · 안보
- 4 정치 · 일반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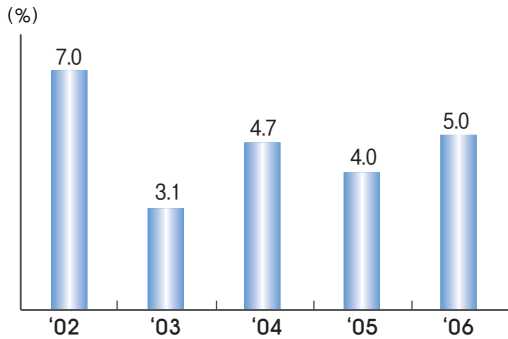


(1) 안정속의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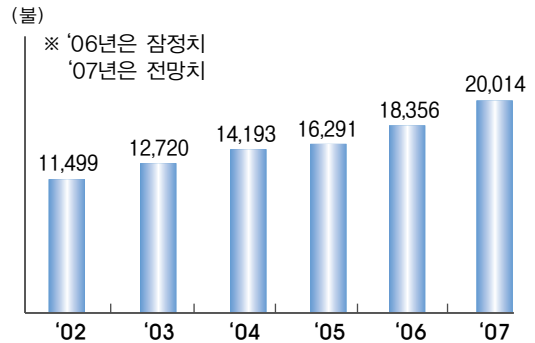
◆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불확실성(북한의 NPT 탈퇴)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양

- * GDP 연평균 4.2% 성장 (선진국 1만불 → 2만불 기간중 평균 3.2% 성장, '06년도 5% 성장은 OECD 국가 최상위권)
- * 1인당 국민소득 2007년 2만불 달성 전망
- * 두자릿수의 수출 증가율, 수출 3,000억불 달성
- * 외환보유고 세계 5위,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LCD 등 세계 5위권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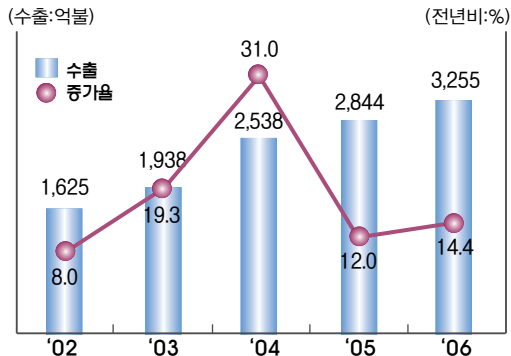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 연평균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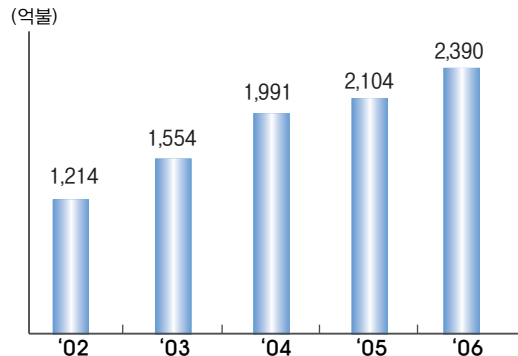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 : '07년 2만불 전망



수출 : 두자릿수 증가율, 수출 3,000억불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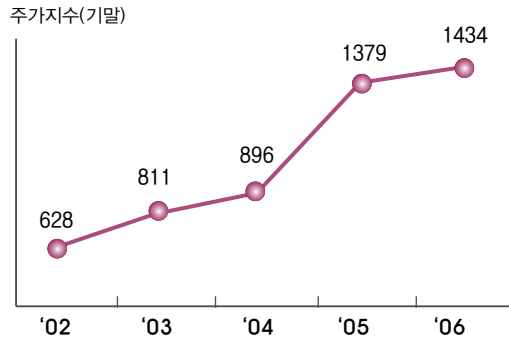
외환 보유액 : 세계 5위



◆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06년 말 1434.5까지 상승 (참여정부 출범이전 '02년 628에 비해 2.3배 상승)

◆ 북핵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국가신용등급 회복

주가 : 1400p대 진입



국가 신용등급

■ S & P

AA-(외환위기 이전) → B+('97.12) → A ('05. 7~)

■ Mood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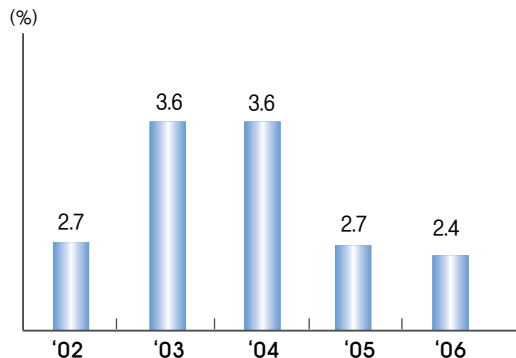
A1(외환위기 이전) → Ba1('97.12) → A3 ('02. 3~)

■ F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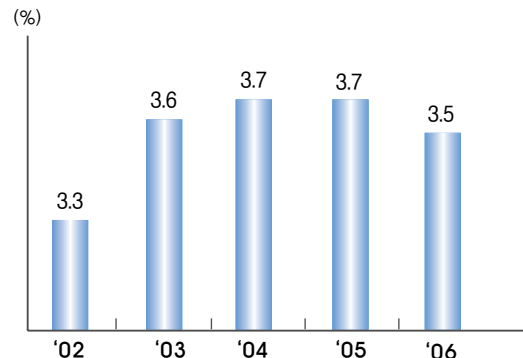
AA-(외환위기 이전) → B-('97.12) → A+ ('05.10~)

* 소비자 물가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의 안정세를 유지, 실업률도 3%대에서 안정

소비자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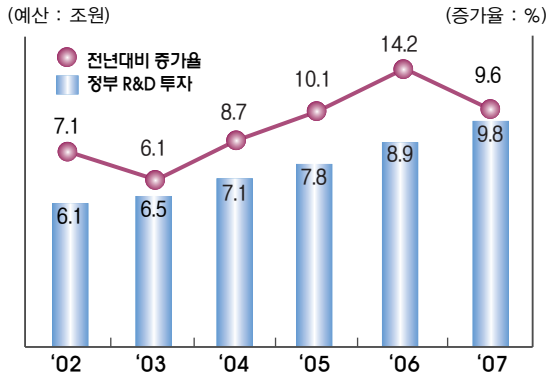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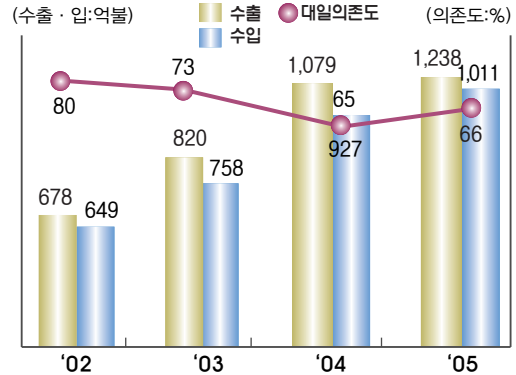
(2) 혁신주도형 경제

- ◆ 요소투입 확대 위주의 성장 방식 →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 *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R&D 예산 확대**
 - * 10대 성장동력 산업,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기술 산업 육성**
 - *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비율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증가, '04년부터 수도권을 초과하는 등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점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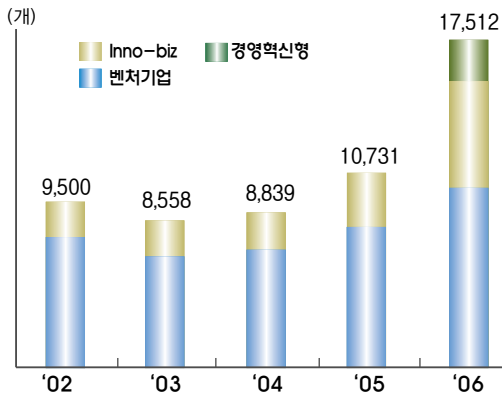
R&D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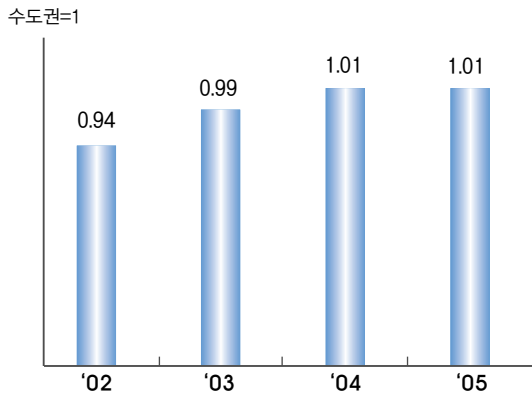
부품소재 산업 : 수출확대, 대일의존 감소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1인당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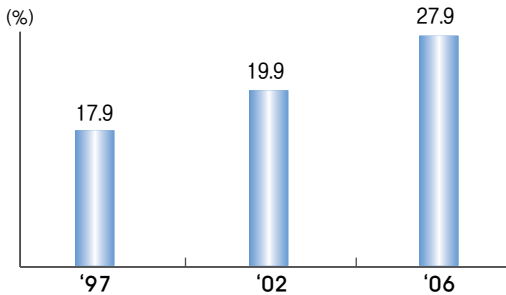


※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지역내 총생산
 ※ 역대 정부별 평균 : 문민정부 0.87 → 국민의 정부 0.95 → 참여정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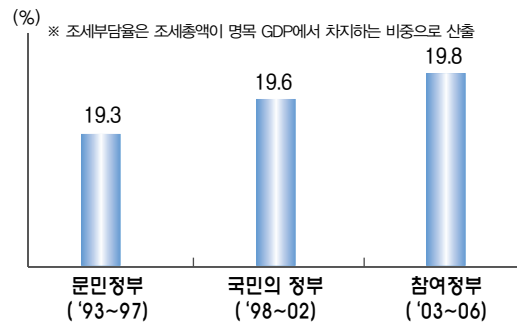
(1) 복지 · 보건

- ◆ 참여정부 들어 재정에서의 복지지출 비중이 27.9%까지 확대되었으나, 조세부담율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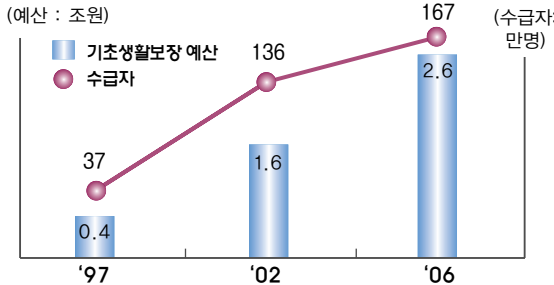
재정대비 복지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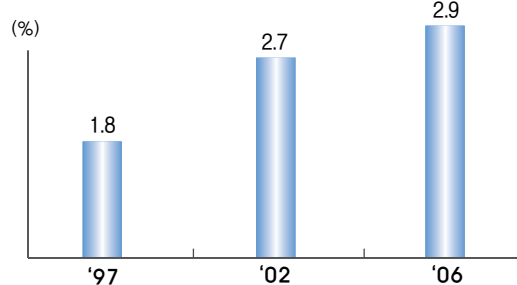
연평균 조세부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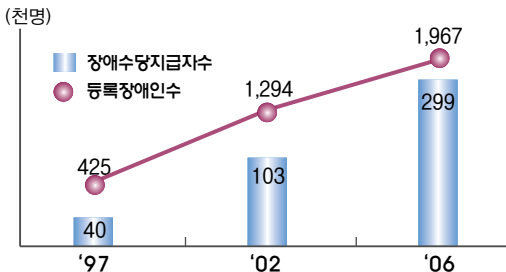
기초생활 보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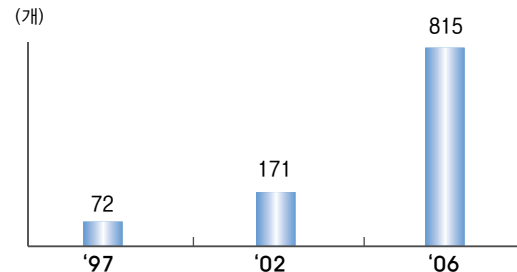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



등록장애인 및 장애수당 지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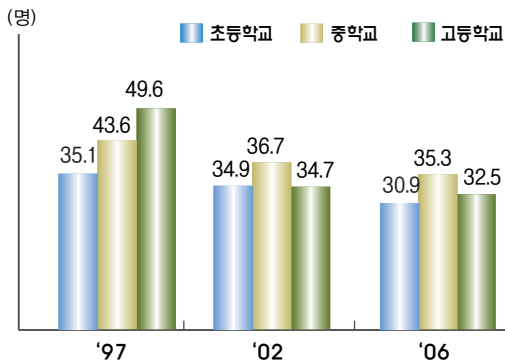
노인 요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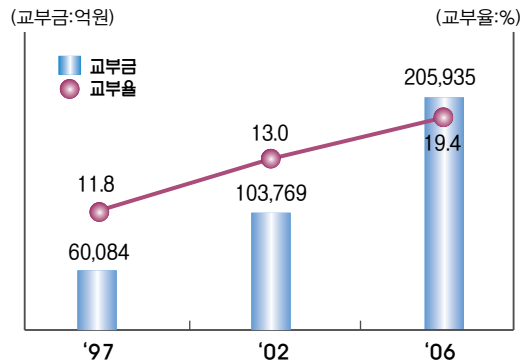
(2) 교육

- ◆ **인적자원 개발** : 민간기업(48개) HRD 인증, 군·여성·고령자 인적자원 개발 추진
- ◆ **교육여건 개선** : 학급당 학생수 감소, 교육재정 확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 교육세 연장, BTL 교육시설 확충 등)
- ◆ **공교육과 직업교육 강화** : 평생학습참여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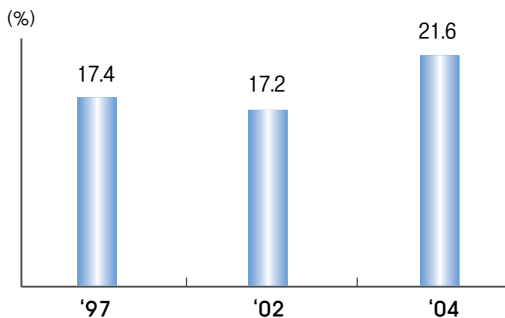
학급당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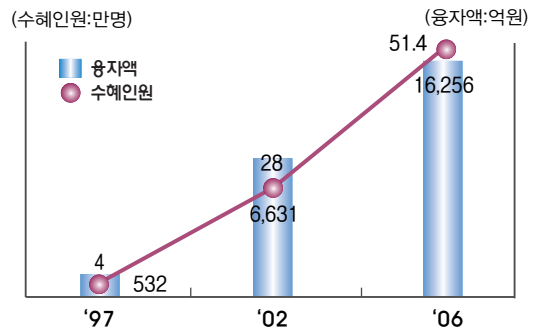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교부율



평생학습 참여율



학자금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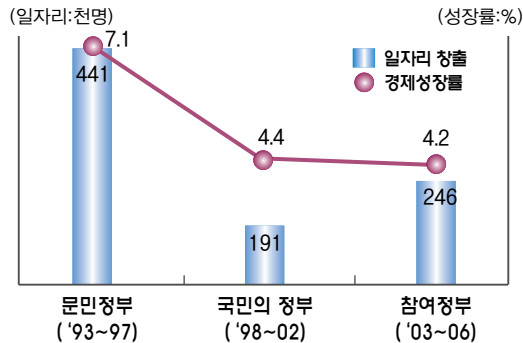


* 참여율 = 평생학습참여자 수 / 15~64세 인구(학생 등 전일제 학생 제외),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5)」가 최종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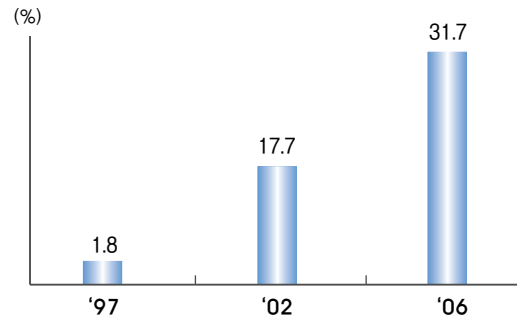
(3) 노동 · 고용

- ◆ **일자리 창출, 직업안전망**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03), 고용서비스 선진화('05), 비정규직 보호대책 수립('06)
- ◆ **노사관계 안정**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06), 공무원 노조법('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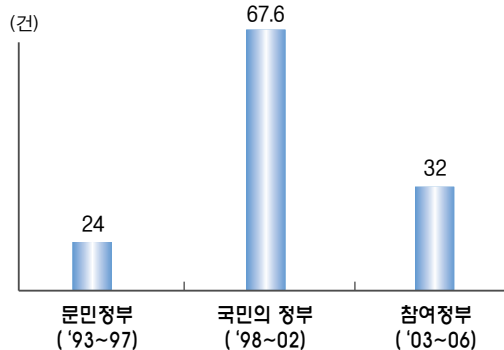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실적(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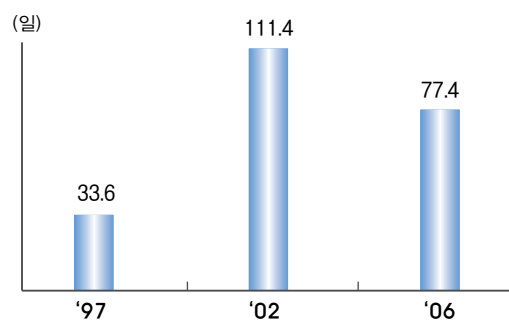
실업급여 수혜율



불법분규 건수 (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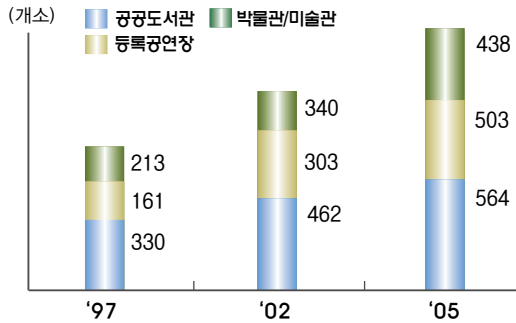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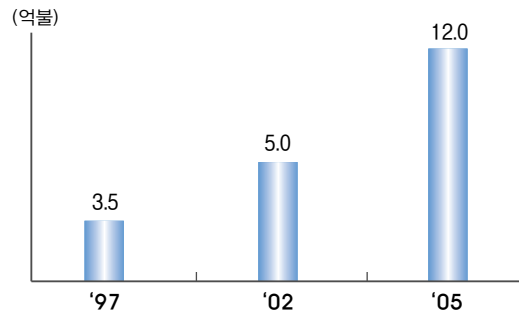
(4) 문화 · 환경

- ◆ **문화 · 관광 · 체육** : 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미래형 관광레저 도시 조성 추진('04), 한브랜드 지원전략 마련('05)
- ◆ **환경 · 지속가능한 개발**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03), 수질오염 총량제('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0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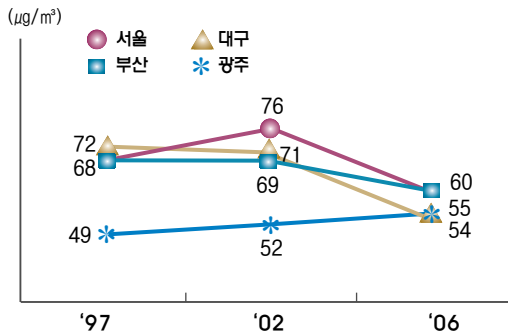
문화기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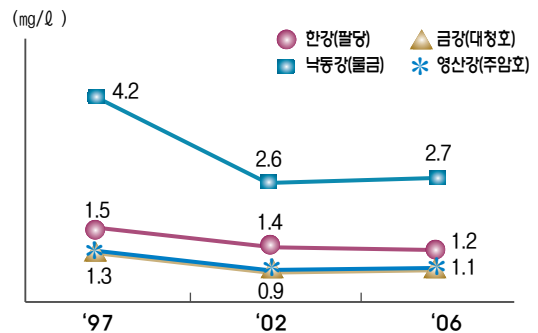
문화산업 수출액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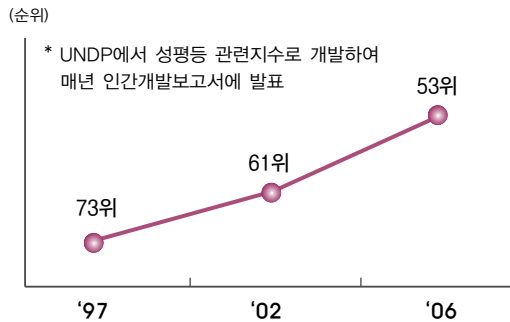
수질오염도 (B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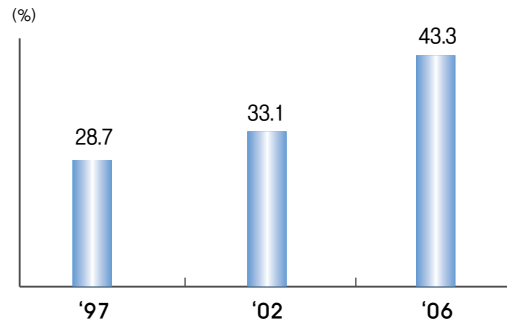
(5) 여성 · 보육

- ◆ **여성권의 신장** : 성매매 방지법('04), 호주제 폐지('05),
- ◆ **육아부담 경감** : 만 5세아 무상보육 · 교육('04), 차등보육료('05),
- ◆ **차별해소** : 비정규직보호입법('06), 결혼이주여성 지원 종합체계('06) 장애인차별금지법('07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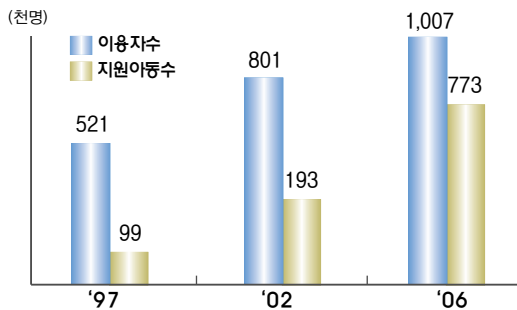
UNDP 여성권한척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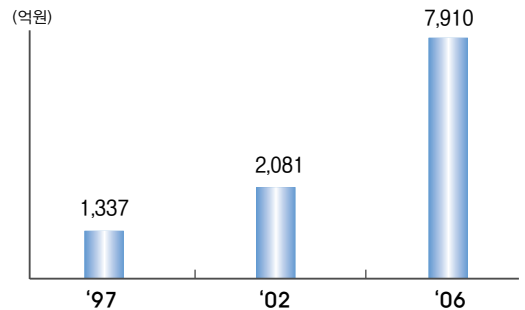
여성공무원 비율



보육시설 이용자 및 보육료 지원 아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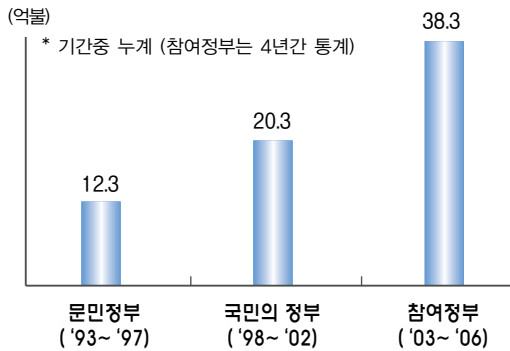
보육료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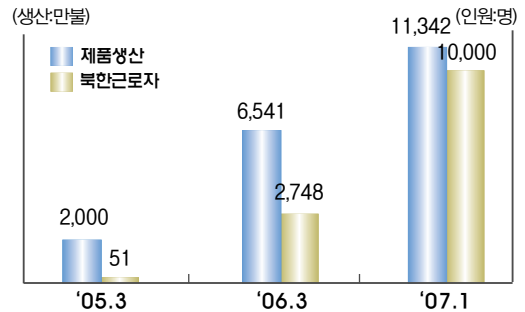
(1) 남북 경제협력의 비약적 발전

◆ '05년부터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남북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05년 연간 10억불 돌파)

남북교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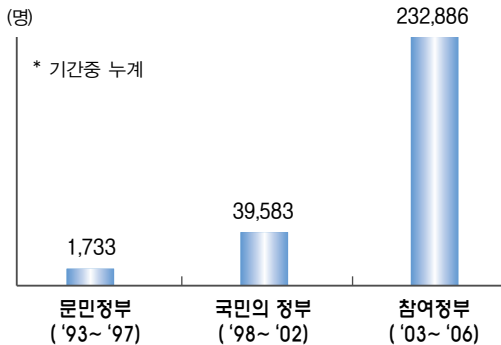
개성공단 생산 및 북한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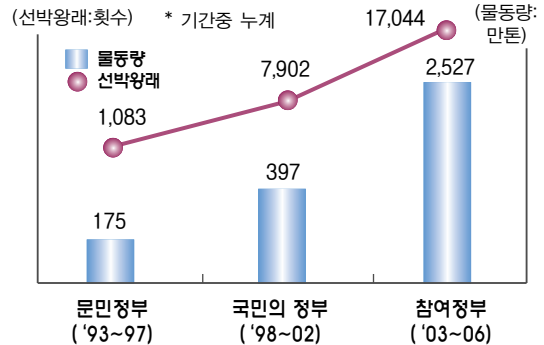
(2) 인적왕래 · 물적교류의 획기적 증가

◆ 참여정부의 남북 왕래인원은 개성공단 개발과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
국민의 정부 왕래인원의 약 6배, '06년 101,708명으로 10만명 시대 개막

남북왕래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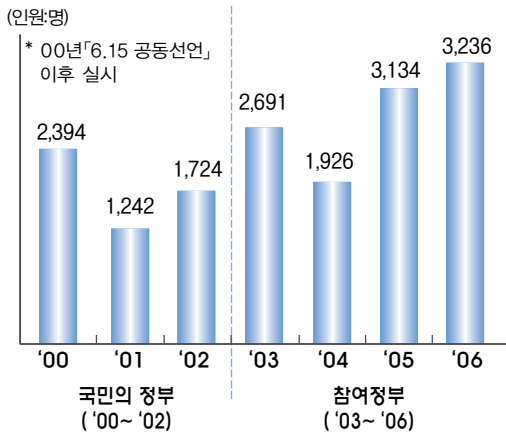
선박왕래 및 물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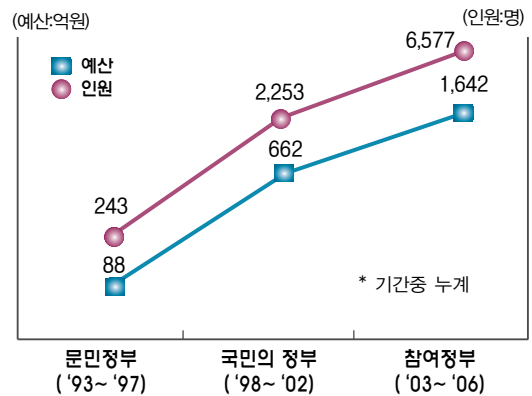
(3) 인도적 과제 해결 지원 / 남북대화 활성화

- ◆ 화상상봉 등 상봉방식 다양화로 이산가족 교류 확대 (참여정부 4년간 1만명 돌파)
- ◆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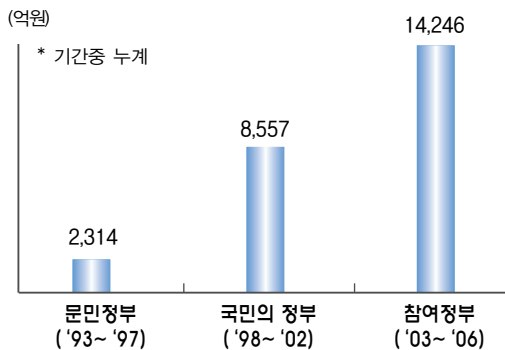


새터민 입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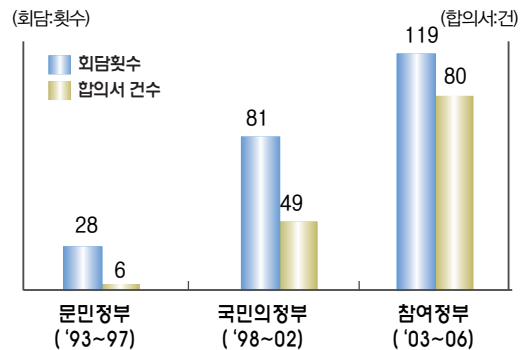


- ◆ '95년부터 시작된 식량·비료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식량난 완화에 기여 ('06년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이후 정부차원의 지원은 유보, 민간차원 지원은 지속)
- ◆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활성화 (국민의 정부 대비 47% 증가)

대북지원 (식량차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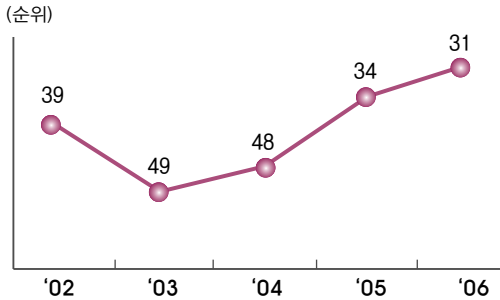
남북회담 개최 및 합의서 현황



(1) 자유신장 · 투명성 확대

- ◆ 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최고...정치자유지수도 '1등급'
- * '국경없는 기자회(RSF)' 는 한국의 언론자유를 아시아 1위로 평가 ('06년 발표) (한국 31위, 일본 51위, 미국 53위)
- *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 '02년 2등급으로 규정하던 한국의 정치자유와 언론자유를 '03년이후 1등급으로 평가

언론자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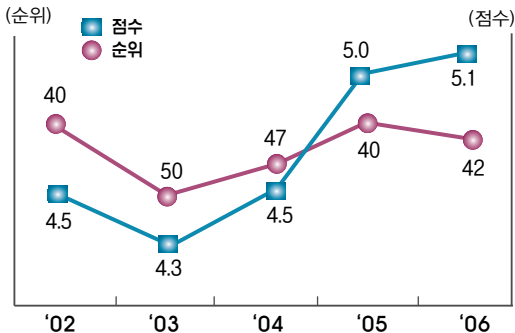


정치 / 언론 자유지수

구분	'02	'03	'04	'05	'06
정치자유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언론자유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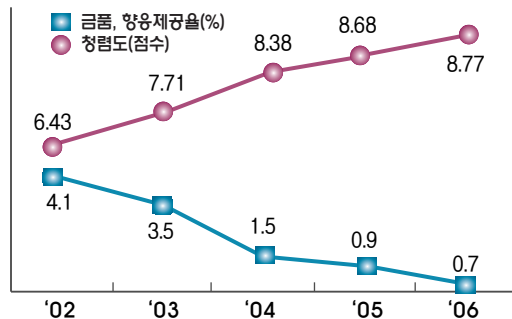
-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02년 상위 39%(40위 /102개국)에서 '05년 상위 25%(42위/163개국)로 투명성 향상
- ◆ 국가청렴위원회가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지수도 '02년 6.43에서 '06년 8.77로 지속적으로 상승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공공부문(정치 포함)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청렴위 공공기관 청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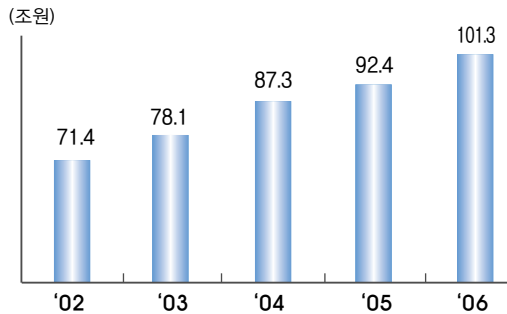


• 청렴도 :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와,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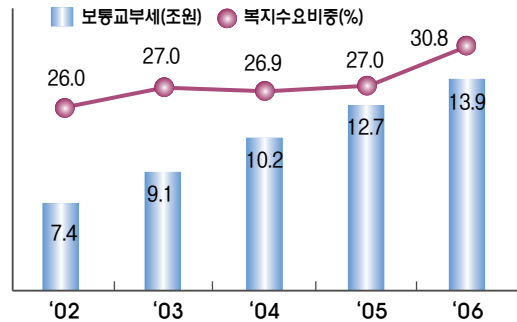
(2) 분권 · 자치

- ◆ 동사무소 → 복지문화센터 ('07 완료)
- ◆ 주민투표('04), 소송('05), 소환('06) 제도 도입
- ◆ 지방재원 확충, 교부세 배분시 복지수요 비중 강화 ('07년 복지 36%, 개발 31%)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04),

지방재정 규모



보통교부세 복지수요 비중



지방이양 사무

구 분	'02	'03	'04	'05	'06
확정(국무회의통과)	251건	478건	53건	203건	80건
완료(법령개정)	146건	164건	204건	436건	43건

(3) 정부 혁신

◆ 혁신변곡점을 통과한 중앙행정기관의 혁신수준 변화

- * 정부 전반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04년부터 혁신관리평가 실시
- * 혁신 5단계 : '04년 5개 기관 → '06년 24개 기관으로 변화 속도 가속화

중앙행정기관 혁신수준



주요 혁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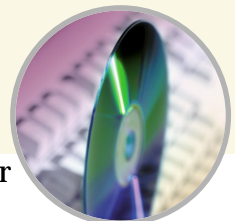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I

주요 국정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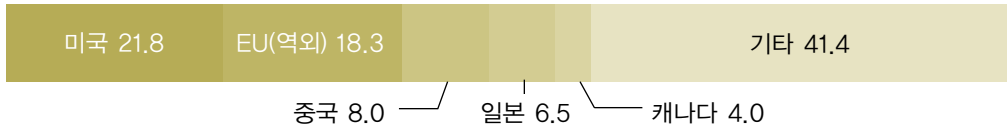
- 1 한미 FTA
- 2 부동산 대책
- 3 비전 2030
- 4 양극화
- 5 저출산·고령화
- 6 「2+5」전략
- 7 일자리 창출
- 8 비정규직



(1) 미국과의 FTA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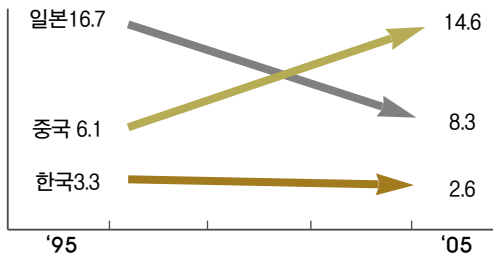
◆ 미국 수입시장 규모 : 1.7조불 > 일본 + 중국 + 아세안 1.5조불

미국의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 (20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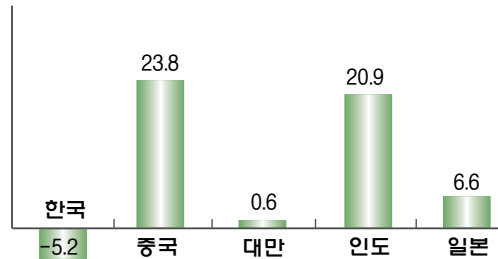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감소 추세 → FTA로 반전 도모

미국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1995 - 2005,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 (2005, %)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연구원, '06.3)

구 분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06.1) ¹⁾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06.3) ²⁾
실질 GDP	1.99%, 135억불	7.75%, 352억불
대미 수출	15.1%, 71억불	22.7%, 82억불
수입	39.4%, 122억불	44.4%, 129억불
무역수지	△ 51억불	△ 47억불
대세계 수출(미국포함)	5.0%, 86.6억불	6.6%, 124.6억불
수입	6.2%, 97.4억불	7.5%, 118.6억불
무역수지	△ 11억불	6억불
고 용	0.63%, 104천명	3.30%, 551천명

주 : 1) 기존분석 : 제조업 전면개방 + 농산물 80%개방(한국만) + 서비스 교역장벽 20% 감축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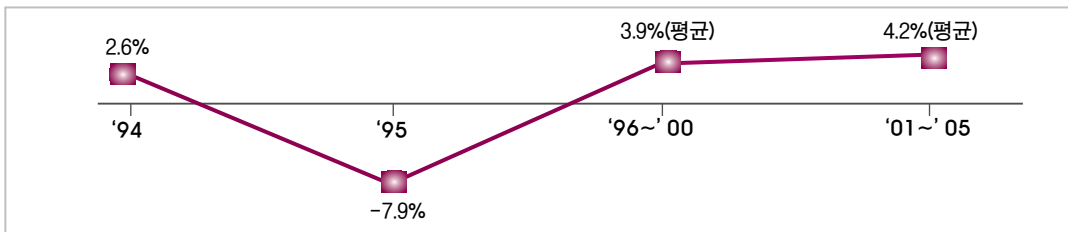
2) 新분석(생산성 증대 효과 고려)은 기존분석 시나리오에 제조업 및 서비스 각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 (1% 포인트) 를 추가

FTA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는 양극화가 심화되었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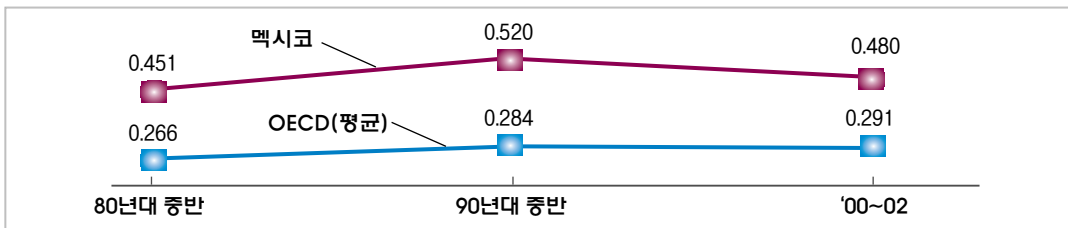
- ▶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NAFTA 때문이라기보다 내부 구조조정과 지연과 폐소화 위기(1995)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
- ▶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면서 국민소득도 증가
 -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폐소화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1995~199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당 폭으로 증가
 - 최근 들어서는 지니계수가 개선되면서 빈곤문제도 조금씩 완화되는 양상

멕시코 1994년 이후 1인당 GDP 추이

※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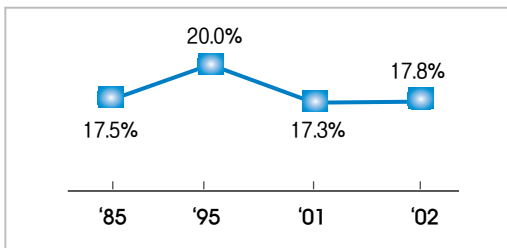


멕시코와 OECD(평균) 지니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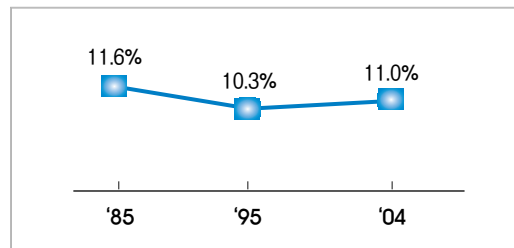
- ◆ 일부에서는 캐나다가 NAFTA 이후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재원이 고갈되면서 빈곤층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OECD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공공사회 부문 재정지출은 NAFTA 체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음

사회보장재정 지출/GDP



빈곤층 비율

※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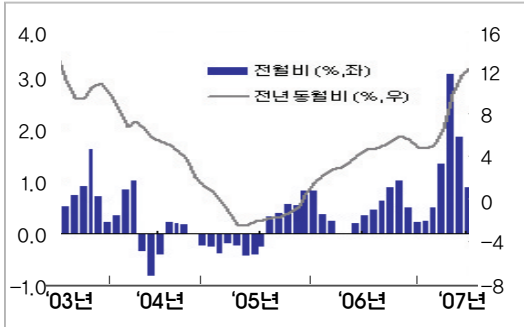
(1) 부동산시장 동향

◆ (매매가) 정부의 11.15대책(주택공급 확대), 1·11 대책(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등)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안정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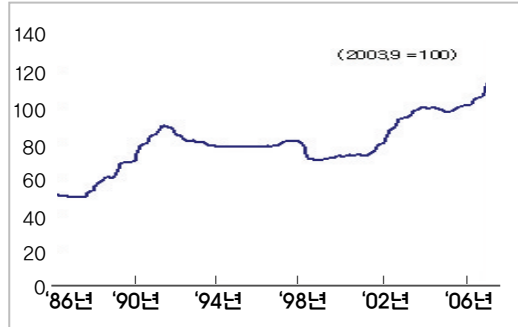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05년	'06년	'06.11	'06.12	'07.1	1.15	1.22	1.29	2.5	2.12
전국	4.0	11.6	3.1	1.9	0.9	0.2	0.1	0.1	0.1	0.0
서울	5.1	18.9	4.8	3.0	1.5	0.3	0.1	0.0	0.0	0.1
수도권	6.3	20.3	5.4	3.2	1.5	0.3	0.1	0.1	0.1	0.1

매매 가격 변동률



매매가격지수 추이 ('8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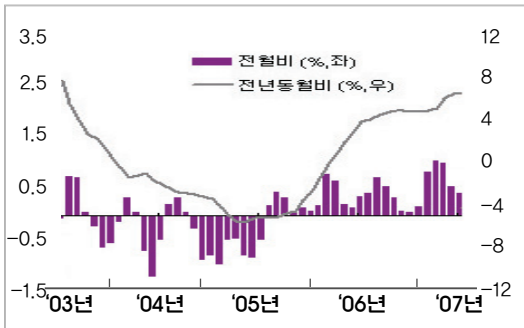


◆ (전세가) 06.12월이후 전반적 안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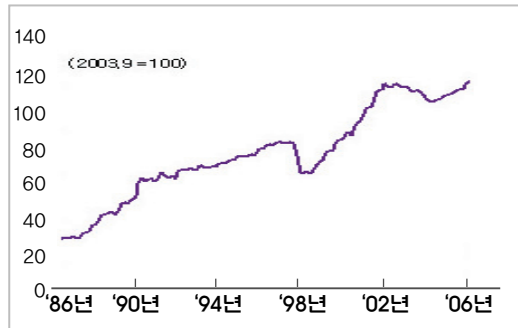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05년	'06년	'06.11	'06.12	'07.1	1.15	1.22	1.29	2.5	2.12
전국	3.0	6.5	1.0	0.6	0.4	0.1	0.1	0.0	0.1	0.1
서울	2.3	9.8	1.6	0.6	0.5	0.2	0.1	0.0	0.1	0.1
수도권	3.8	10.4	1.6	0.9	0.7	0.2	0.1	0.0	0.1	0.1

전세 가격 변동률



전세가격지수 추이 ('86~'07)



(2) 주택보급률

(단위 : %, 천호, 천가구)

구분	'00	'01	'02	'03	'04	'05
전국	96.2	98.3	100.6	101.2	102.2	105.9
주택수	11,472	11,892	12,358	12,669	12,988	13,223
가구수	11,928	12,099	12,286	12,515	12,714	12,491
수도권	86.1	88.6	91.6	92.8	93.9	96.8
주택수	4,731	4,966	5,239	5,431	5,614	5,782
가구수	5,494	5,605	5,719	5,855	5,979	5,975
서울	77.4	79.7	82.4	86.3	89.2	89.7
주택수	1,973	2,032	2,103	2,203	2,278	2,322
가구수	2,548	2,550	2,551	2,553	2,554	2,588

(3)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현황

- ◆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02년중 급증(전년대비 41.1% 증가)한 이후 '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06말 현재 345.6조원)
- ◆ '07년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로 전환

은행권의 가계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02	'03	'04	'05	'06	'07.1
가계대출	222.3	253.8	276.3	305.5	345.6 ^P	345.4 ^P
증감액	64.7	31.5	22.5	29.2	40.1	△0.2
<증감률>	<41.1>	<14.2>	<8.9>	<10.6>	<13.1>	<△0.1>
주택담보대출	131.9	153.2	169.6	190.2	217.0	217.8
증감액	45.5	21.3	16.4	20.6	26.8	0.8
<증감률>	<52.7>	<16.1>	<10.7>	<12.1>	<14.1>	<0.4>

(4)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별 주요 내용

대책명	주요내용
10.29 대책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개선 : 종합 부동산세 조기 시행('06 → '05),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60% 인상) 등 • 투기수요 억제 : 자금출처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속,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재고시('03.12월 93만세대) 등 • 주택공급 확대 : 강북에 12개 뉴타운건설(선정완료 : '03.11),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 확대(50 → 75%)('04.1)
8.31 대책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투명화 : 실거래가 신고('06.1월), 실거래가 부동산등기부 기재('06.6) • 세제 합리화 : 종부세 부과기준 변경(주택 6억원 토지 3억원, 세대별 합산, '06.12),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07.1) • 주택공급확대 : 송파거여지구(205만평) 개발, 5년간 공공택지 1,500만평 추가확보, 강북지역 광역개발 추진(특별법 시행 '06.7) 등 • 서민주거복지 :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재개,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율 인하,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등
3.30 대책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 정상지가 상승 초과분(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 형태로 환수('06.9) • 재건축 절차 합리화 : 안전진단 예비평가 강화(민간 → 공공기관), 안전진단 결과 검증(재검토 권한을 시도로 상향) 등 • 투기지역 고가아파트(6억원초과) 구입시 종전 LTV규제(40~60%)외에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대출 제한
11.15 대책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수요 억제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LTV) 규제강화(비은행 60~70 → 50% 등),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 공급확대 : 신규택지 확보('07년 상반기), 밀도 조정(용적률 등) • 분양가 인하 : 택지조성비 절감(녹지율 조정, 용적률 상향 등)
1.11대책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택지 원가공개 항목 확대 (7개 → 61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택지비는 감정가) 및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원가공개 시행 (7개항목, 지자체장 공개) •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90% → 80%) 및 전매제한 기간 확대
1.31대책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12년 15%, '17년 20%) • 민간재원을 활용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건설(연간 5만호, '07~'17년 총 50만호) •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13년 이후에도 지속 공급('13~'27년 총 100만호) • 수도권에서 주공 등 공공부문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年 35천호 → 최소 50천호 수준으로 공급

(1) 비전 실현을 통한 미래의 모습

구 분	'05	'10	'20	'30	비고('05)
GDP 규모 ¹⁾ (십억불)	788 (788)	1,122 (1,262)	1,824 (2,567)	2,406 (4,145)	미국 12,486 일본 4,571
1인당 GDP ¹⁾ (천불)	16 (16)	23 (26)	37 (51)	49 (84)	미국 42 일본 36
국가경쟁력 (순위, IMD)	29	20	15	10	미국 1위 일본 21위
삶의 질 (순위, IMD)	41	30	20	10	미국 14위 일본 35위

주 : 1)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안은 경상가격 기준

(2) 비전 2030 주요 투자계획

- ◆ 2030 재정지출 구조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 전체재정 대비 복지재정 지출은 '30년에 40% 수준

구 분	한 국		호 주	스 웨 덴	미 국	이 태 리	OECD 평균
	('05)	('30)	('04)	('03)	('04)	('03)	
복지재정/ 전체재정 (%)	25.2	40% 수준	52.0	54.1	57.2	49.3	54.7
경제재정/ 전체재정 (%)	19.9	10% 수준	6.4	9.9	6.5	3.9	9.1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05)

(3) 정책 고객별 · 연령별 국민생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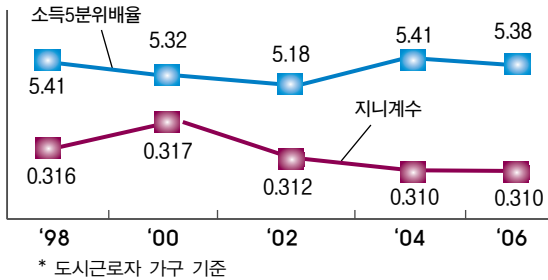
◆ 숫자는 ('05) → ('10) → ('20) → ('30)

	20대	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 국민	노인, 2/3가 연금혜택 받는다 * 연금수급률 17→30→47→66%			
	치매 · 중풍노인, 사회에서 책임진다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1 → 35 → 70 → 100% * 정기요양병상수(인구천명당) 0.5 → 1.5 → 3 → 4개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 * 건강보험 보장률 65 → 72 → 80 → 85%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4 → 10 → 15 → 20% * 삶의 질(IMD, 60개국) 41 → 30 → 20 → 10위 * 공공임대주택 비율 5.1 → 10.1 → 16 → 16%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 국민문화향유율('03) 62 → 70 → 90 → 95% *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9만 → 5만 → 4.5만 → 4만			
	투명하고 상부상조하는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다 * 청렴도 지수(TI, 159개국) 40 → 25 → 10 → 5위 * 자원봉사 참여율 15 → 20 → 30 → 50% * 5대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 72.6 → 73 → 75 → 77%			
근로자	고용,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다 * 평생학습 참여율('04) 22 → 30 → 40 → 50% * 고용률 63.7 → 67 → 70 → 72%			
	비정규직,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63 → 70 → 80 → 85%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 0.77 → 0.58 → 0.37 → 0.24%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 연간실근로시간 2,336 → 2,300 → 2,166 → 2,033시간			
기업인	실업, 재기의 기회가 확대된다 * 실업자후련 참여자 취업률 50 → 51 → 60 → 65%			
	협력적 노사관계, 대 · 중소기업간 상생,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56 → 42 → 26 → 15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IMD, 60개국) 30 → 25 → 20 → 10위			
	공정한 시장경쟁, 대학연구성과,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 * 산학간 지식이전 정도(IMD, 60개국) 21 → 15 → 10 → 5위			
	우리 기술과 상품, 세계 어디서나 인정 받는다 * 부품개발 기술수준(일본=100) 84 → 94 → 98 → 105 * 혁신형 중소기업 1 → 3 → 6 → 9만개 * 세계 일류상품 505 → 1,000 → 1,550 → 2,000개			

	20대	30대	40~50대	60대 이상
학생 / 청소년		우리 아이들,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공부한다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2 → 30 → 27 → 23명		
		방과후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맡긴다 * 방과후 활동 수혜율 32 → 67 → 72 → 75%		
		우리 아이들, 사고없이 안전하게 성장한다 * 아동안전사고율(10만명당) 8.3 → 7.3 → 6.0 → 5.0명		
	학교에서 배운 지식,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다 *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 52 → 40 → 20 → 10위			
여성 / 맞벌이 부부	일하는 여성, 남녀차별 없이 능력으로 인정 받는다 * 여성권한척도(UNDP, 80개국) 59 → 45 → 30 → 20위			
		아이, 건강하게 낳아 걱정없이 키운다 * 영아사망률(천명당) ('02) 5.3 → 4.5 → 4.0 → 3.0명 * 육아서비스 수혜율 47 → 65 → 67 → 74%		
장애인	장애인, 원하는 직업에서 자아를 실현한다 * 장애인 실고용률 ('04) 1.3 → 1.7 → 2.5 → 3.0% *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상용근로자 대비) 44.5 → 50 → 75 → 90%			
	신속하고 편리하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공립 장애인 재활병원수 1 → 7 → 16 → 32개소			
	더 이상 이동과 정보이용에 불편은 없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2.7 → 82 → 95 → 100% *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36 → 50 → 95 → 100%			
저소득층	최소한의 생활, 국가가 보장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0) 23 → 18 → 9 → 0%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3,800 → 3,320 → 2,160 → 1,000명			
농어업인	농어업인, 일하기 좋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40 → 64 → 76 → 80%			
	규모화·전문화로 농어업 경쟁력이 확보된다 * 쌀전업농 쌀생산비중 30 → 41 → 60 → 79% * 수산자원량 790 → 880 → 1,000 → 1,000만톤			

(1) 소득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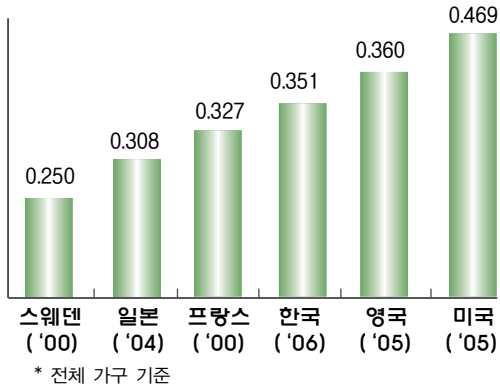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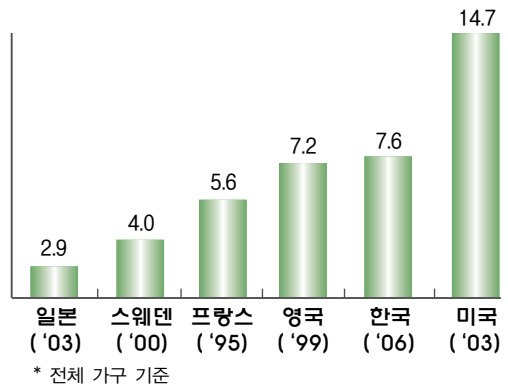
* **지니계수** :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

* **5분위 배율** :
전체 조사가구를 소득순으로 5등분하여 상위 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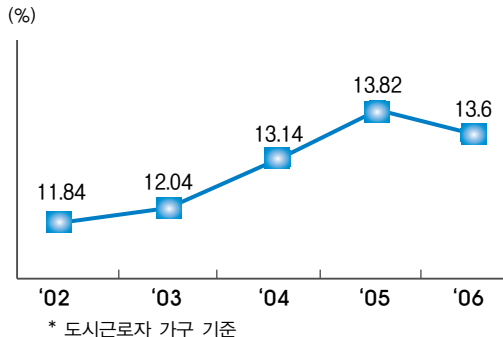
국가별 지니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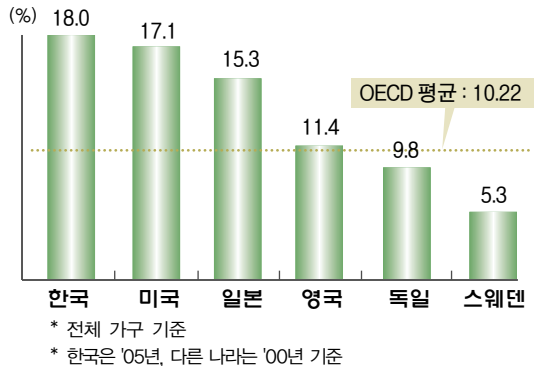
국가별 소득 5분위배율 비교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전체가구) 추이



상대빈곤율 국제비교



(2) 교육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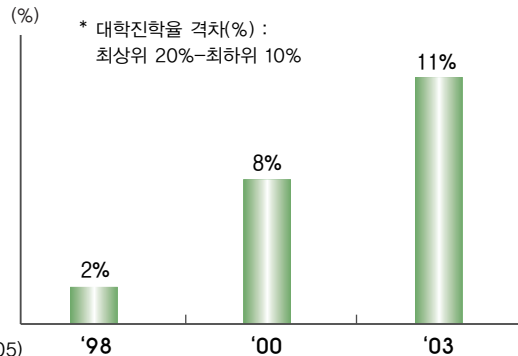
소득분위별 교육비

(2003년 기준)

구분	1분위	10분위	10분위/ 1분위
총교육비 (월평균)	15.7만원	59.1만원	3.8배
사교육비 (월평균)	8.5만원	40.7만원	4.8배

* 출처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수립연구(한국교육개발원,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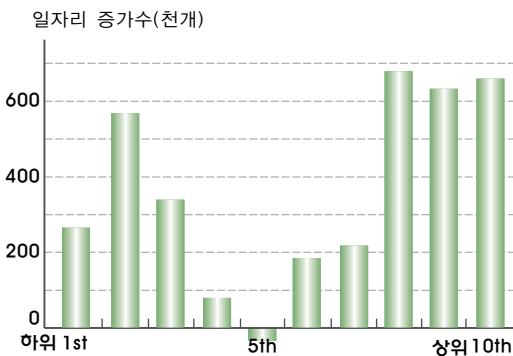
소득분위별 대학진학을 격차



(3) 일자리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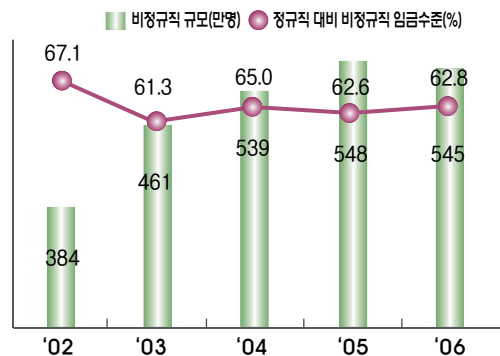
- ◆ '평균보수 수준 상위 30%와 하위 30%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40~70%의 일자리는 정체 상태를 보여 하위계층 일자리 비중이 증가
- ◆ '06.8 현재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62.8%수준

일자리 10분위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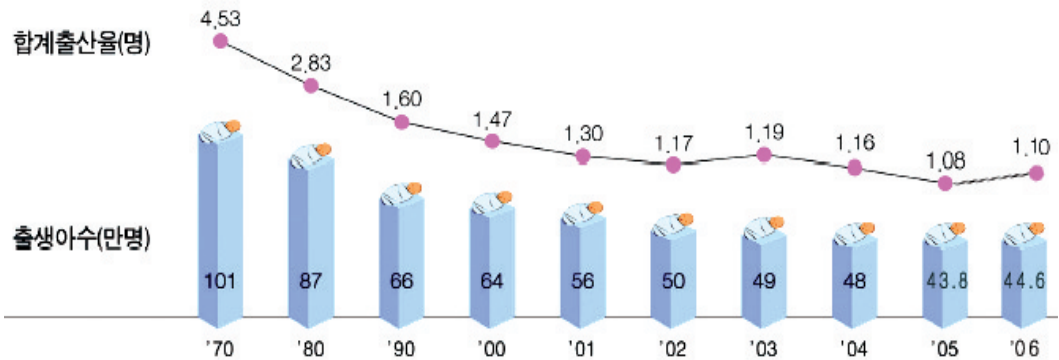
* 전체 취업자 기준, ('93~'02)

비정규직 현황



(1) 저출산 · 고령화 현황

- ◆ 83년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 2.1명)에 도달하여 저출산 시대 시작
- ◆ '05년 출생아 수(44만명)는 '80년(87만명)의 절반 수준
- * 합계출산율 1.08명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체수준에 비해 1명씩(또는 약 50%)을 덜 출산하고 있다는 의미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 수

- ◆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그 비율이 2005년 전체인구의 9.3%, 2020년 15.7%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

고령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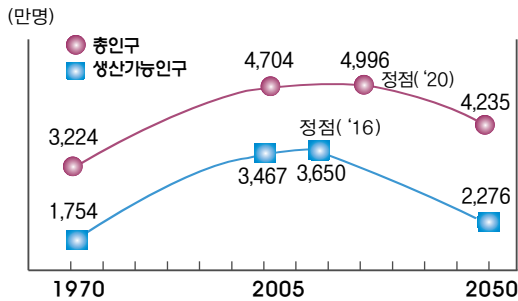
* 고령화율 : 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고령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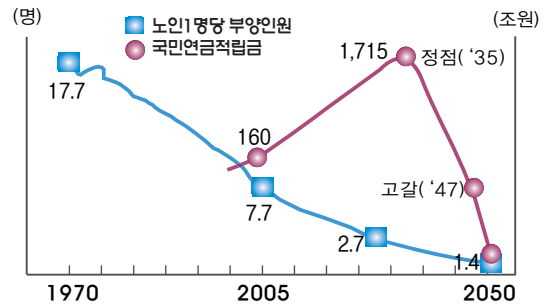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도	
	고령화 사회 (7%)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	고령 사회 도달	초고령 사회 도달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미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 ◆ 총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이 정점)
-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연금·의료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총인구 · 생산가능인구 전망



국민연금 적립 · 노인 1인당 부양인구 전망



(2) 대책 및 전망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추진** ⇒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 회복
 -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5년간 10조원 투자, • 방과 후 학교 대폭 확대 → 사교육 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 및 확충, • 입양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 ◆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요양인프라 확충 등 노인수발보험 시행 기반 조성, • 노인 주거·교통 편의 증진,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및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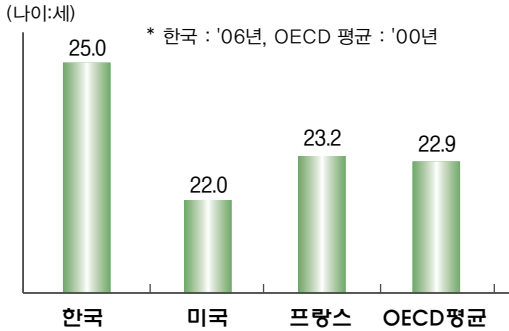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수립 후 합계출산율 전망

연 도	'05	'10	'15	'20
기본계획 수립 후(後)(명)	-	1.40	1.6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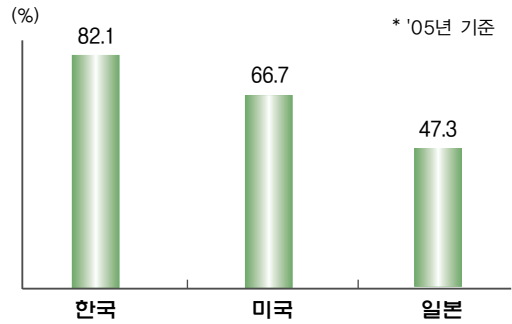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 ◆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서 개인의 생애 총 근로기간은 선진국보다 7~8년 이상 짧음.
 - 장기 군 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2~3년 지연
- ◆ 병력감축으로 현역 입대소요가 줄게 되어 잉여자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병역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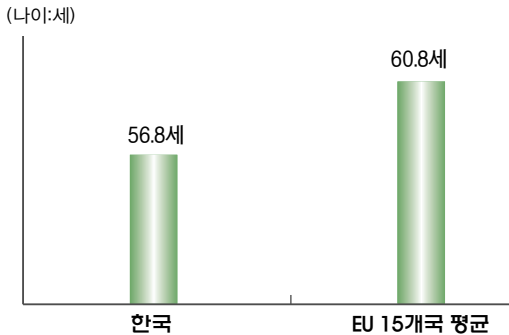
입직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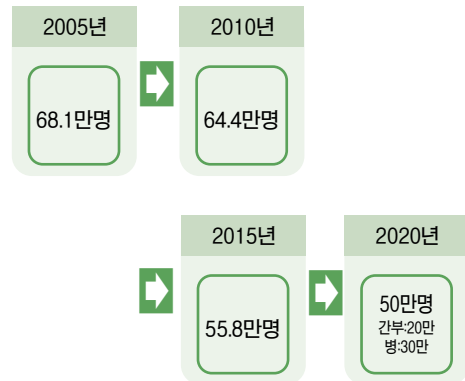
대학진학률



평균 퇴직 연령



병력 축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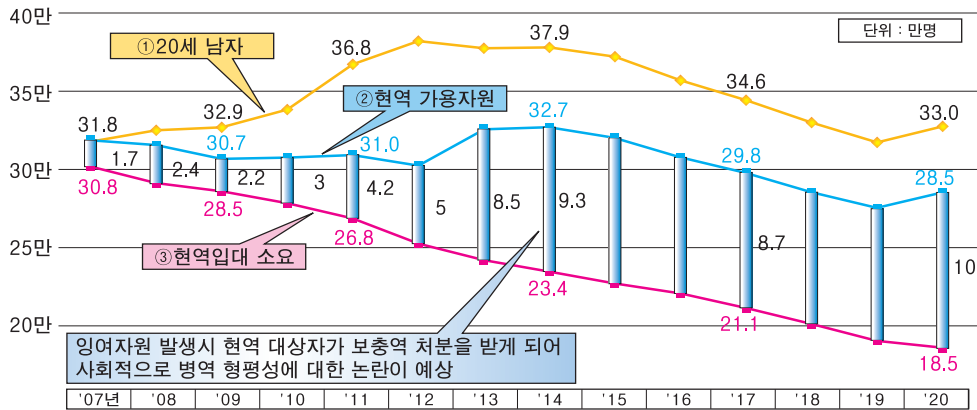
* 한국 : '05년, EU 15개국 평균 : '02년
 ※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이직연령은 54세로 더욱 낮은 수준('06, 통계청 고령층 경활인구 부가조사)

(2) 병역제도 개선 방향

- ◆ 병역자원 전망 결과 현역소요대비 연평균 6만 5천명의 잉여자원 발생이 예상 되어 잉여자원 해소를 위한 복무기간 단축 필요

① 복무기간 24개월 적용시 병역자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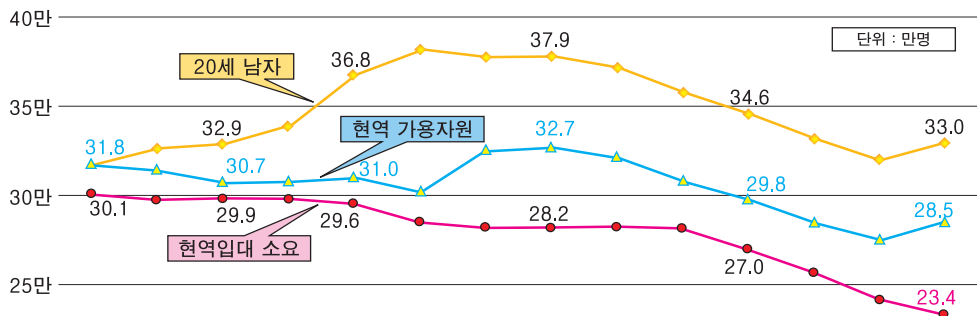
- 국방개혁이 추진되는 '08~'20년간 현역가용자원은 31.8~28.5만명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인 반면, 현역 입대소요는 30.1~18.5만명으로 점진적 감소 전망



② 연도별 단축시 전망

[연도별 단축기간(입대자 기준)]

입대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단축 기간(일)	1~18	19~35	36~52	53~70	71~87	88~113	114~139	140~165	166~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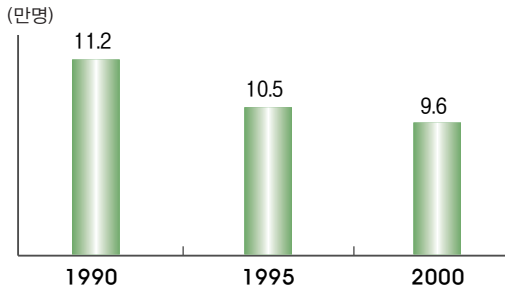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과부족	1.7	1.6	0.9	1.0	1.5	2.1	4.4	4.5	3.8	2.6	2.8	2.8	3.3	5.1

⇒ 현역소요 대비 연 1~3만명의 여유자원 확보로 현역충원과 안정적 병역자원 수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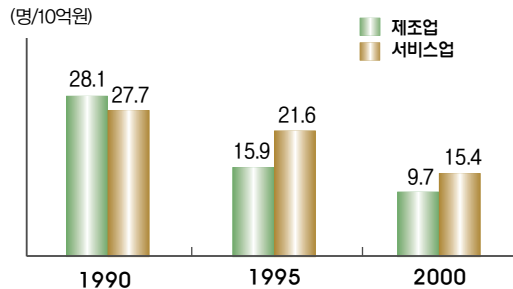
(1) 일자리 창출 여건

- ◆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설비자동화 등으로 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도 약화 (Jobless growth)

1% 성장의 유발 취업자수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일자리수)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여성·청년·고령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 ◆ 정부는 '07년부터 '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를 창출키로 하고, 우선 '07년 재정투입 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확대 ('06년 1조4,0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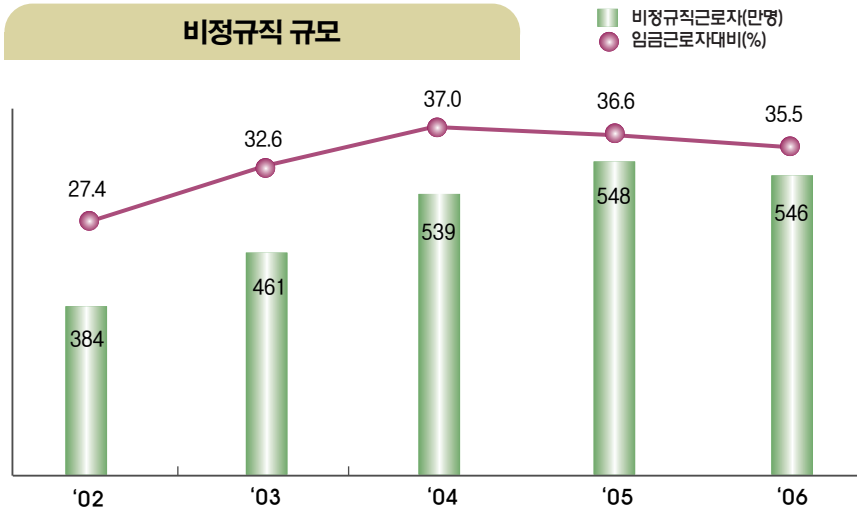


(3)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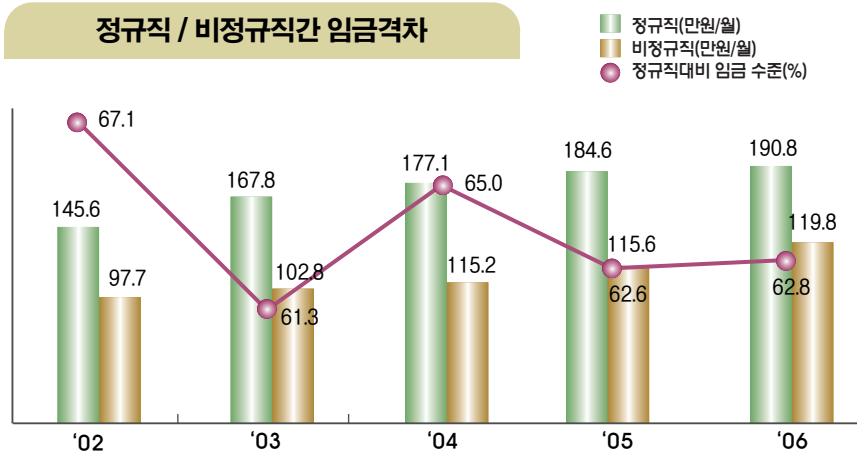
구 분	'04		'05		'06		'07	
	금액 (억원)	인원 (천명)	금액 (억원)	인원 (천명)	금액 (억원)	인원 (천명)	금액 (억원)	인원 (천명)
계	11,329	416	14,038	461	15,463	528	27,776	629
사회서비스 일자리	949	47	1,691	69	3,039	134	12,944	201
청년실업대책 (공공부문)	6,056	221	7,885	252	7,573	237	8,436	203
취약계층 일자리·직업훈련	4,324	148	4,462	140	4,851	157	6,396	225

(1) 비정규직 규모

- '06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546만명으로, '01년 조사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2.6만명감소, 감소요인은 도·소매 음식·숙박업(14.1만명), 건설업(5.2만명) 등의 감소에 주로 기인



(2) 정규직 /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 근로복지, 사회보험 수혜율도 증가추세이나 정규직의 1/2을 하회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Ⅲ 분야별 주요 통계

- 경제 분야
- 사회 분야
- 정부 · 일반행정 분야





경제 분야

1. 경제일반

(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03	'04	'05	'06
명목 GDP	(억불)	6,080	6,809	7,875	6,390(06.1/4~3/4) ¹⁾
	(조원)	724.7	779.4	806.6	614.1 (06.1/4~3/4)
실질 GDP성장률(%)		3.1	4.7	4.0	5.0
실업률(%)		3.6	3.7	3.7	3.5
청년실업률(%)		8.0	8.3	8.0	7.9
소비자물가(%)		3.5	3.6	2.8	2.2
경상수지(억불)		119.5	281.7	149.8	60.9
자본수지(억불)		139.1	76.0	47.6	186.2
수출(억불) (전년비, %)		1,938 (19.3)	2,538 (31.0)	2,844 (12.0)	3,255 (14.4)
수입(억불) (전년비, %)		1,788 (17.6)	2,245 (25.5)	2,612 (16.4)	3,094 (18.4)
환율 (₩/\$, 기말종가)		1,192	1,144	1,024	955
외환보유액(억불)		1,554	1,991	2,104	2,390
종합주가지수(기말)		810.7	895.9	1,379.4	1,434.5

1) 명목 GDP '06년 4/4분기 잠정치는 3월중 발표 예정

2007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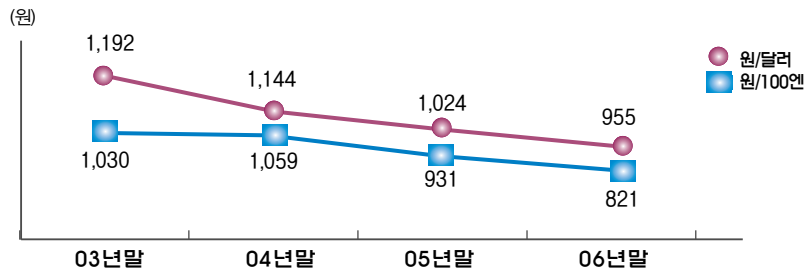
- ◆ 전반적으로 경기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복속도는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

	'06년 실적	'07년 전망
경제 성장률	5% 수준	4.5% 내외
취업자 증가	30만명 내외	30만명 내외
소비자 물가	2.2% 수준	2.7% 내외
경상 수지	60억불 수준	10억불 내외

※ 경제운용방향 전망치인 4.5% 성장을 달성하고, 환율의 현 수준 유지가 전제될 경우 2007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2) 환율 동향

구분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05년말대비	03년말대비
원/달러	1,192	1,144	1,024	955	8.8% 절상	28.2% 절상
원/100엔	1,030	1,059	931	821	9.3% 절상	42.4% 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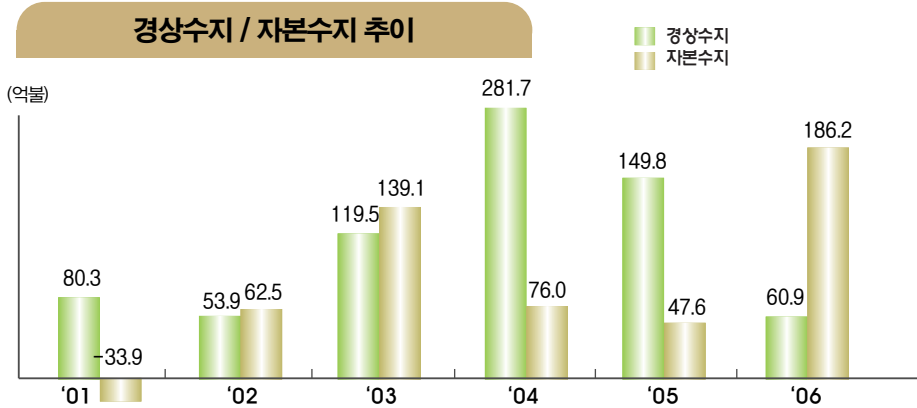


환율하락의 경제적 효과

구분	GDP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환율10%하락	△ 0.7%p	△ 50.3억불	△ 0.8%p

* 환율 10원하락시 세수 350억원 감소(재경부)

(3) 국제수지 동향



최근 경상수지 흑자 축소원인

① 원화강세,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 원화 절상률 : (05년중) 2.3% → (06년중) 8.8%

* 유가(달러/배럴, 미국 WTI) : (05년말) 61.06달러 → (06.7월말) 74.56달러 → (06.12월말) 60.9달러

② 해외여행 등 해외소비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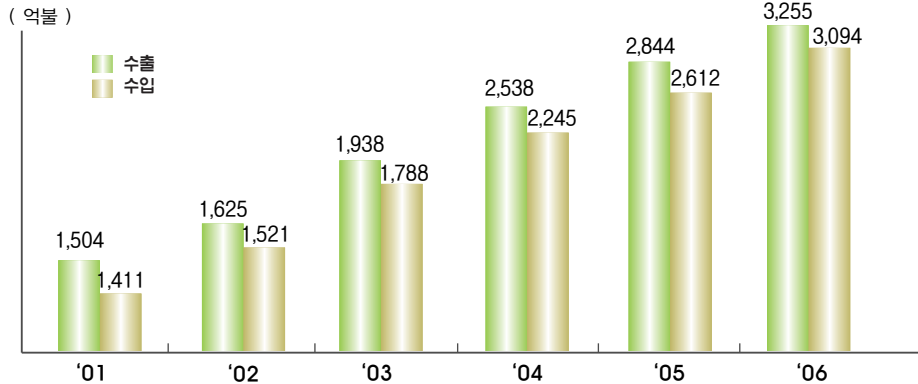
* 06년중 내국인 출국자(증가율) : 15.2%, 외국인 입국자(증가율) : 2.2%

* 06년중 1인당 지출액 : 1,077달러, 1인당 수입액 : 790달러

	'01	'02	'03	'04	'05	'06
경상수지	80.3	53.9	119.5	281.7	149.8	60.9
상품수지	134.9	147.8	219.5	375.7	326.8	292.1
서비스수지	-38.7	-82.0	-74.2	-80.5	-136.6	-187.6
(여행수지)	-12.3	-45.3	-47.4	-62.8	-96.0	-129.2
자본수지	-33.9	62.5	139.1	76.0	47.6	186.2

(4) 수출입 동향

수출입 추이



◆ 주요 교역국 ('06년 비중)

- 수출 : 중국(21.3%)>EU(14.9%)>미국(13.3%)>일본(8.2%)
- 수입 : 일본(16.8%)>중국(15.7%)>미국(10.9%)>EU(9.7%)

◆ 주요 수출품목('06년) : 반도체(11.5%), 자동차(10.1%), 무선통신기기(8.3%), 석유화학(7.4%), 일반기계(7.3%), 선박(6.8%), 석유제품(6.3%), 철강제품(6.0%)

◆ 주요 수입품목('06년) : 원유(18.0%), 반도체(9.1%), 천연가스(3.9%), 석유제품(3.1%), 컴퓨터(2.9%), 철강판(2.6%), 반도체 제조용장비(2.3%), 동제품(1.8%)

2007년도 수출·입 전망

◆ 수출은 '06년(3,255억불) 대비 10.6% 증가한 3,600억불 예상

- * 수출증가율(%) : ('03)19.3 → ('04)31.0 → ('05)12.0 → ('06)14.4 → ('07)10.6
- 선박(22.1%), 자동차·부품(13.3%), 반도체(10.7%) 등은 10% 이상의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2.0%), 가전(3.5%)은 BRICs 등 신흥시장 성장 및 선진국 시장 교체 수요 등으로 점진적인 수출회복세 기대
- 섬유(△ 5.5%), 컴퓨터(△ 5.4%)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수입은 '06년(3,094억불) 대비 10.9% 증가한 3,430억불 예상

- * 수입증가율 : ('03)17.6 → ('04)25.5 → ('05)16.4 → ('06)18.4 → ('07)10.9
-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에너지수입액 감소, 국내 경제성장 및 설비투자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2. 재정 일반

(1) 주요 재정지표

(단위 : 조원, %)

	'04	'05	'06	'07
◆ 통합재정¹⁾				
• 규모(GDP대비, %)	173.5(22.3)	186.4(23.1)	209.0(24.6)	211.7(23.4)
• 수지(GDP대비, %)	5.2(0.7)	5.1(0.6)	0.9(△0.1)	13.4(1.5)
◆ 예 산				
• 총 계	187.9	195.8	204.2	201.0
일반회계(증가율)	120.2(1.7)	135.2(12.6)	147.0(8.7)	156.5(5.1)
특별회계(증가율)	67.8(0.1)	60.6(△10.5)	57.2(△5.6)	44.4(△22.3)
• 순 계	161.3	167.9	177.5	176.8
◆ 기 금				
– 운용규모(개수)	311.0(59)	324.1(60)	366.4(61)	308.3(58)
◆ 총 조 세(증감률)	151.9(2.8)	163.4(7.5)	170.5(4.3)	185.7(8.9)
• 국 세(증감률)	117.9(2.7)	127.5(8.2)	135.3(6.1)	147.3(8.8)
• 지방세(증감률)	34.2(9.0)	36.0(△5.2)	35.2(△2.2)	38.3(8.8)
◆ 조세부담률(% ²⁾)	19.5	20.3	20.7	20.5
◆ 국민부담률(% ³⁾)	24.6	25.7	26.7	26.3
◆ 국가채무	203.1	248.0	283.5	301.1
(GDP대비, %)	(26.1)	(30.7)	(33.4)	(33.2)
◆ 정부보증채무	66.0	55.0	–	–
(GDP대비, %)	(8.5)	(6.8)		
◆ 적자국채 발행	2.5	9.0	9.3	8.0

1) 통합재정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2) 조세부담률 : (국세+지방세)/GDP

3) 국민부담률 : (국세+지방세+사회보장 기여금)/GDP

(2) 2007년 예산 개요**① 세입 전망 및 지출 규모**

(조원, %)

	'06예산	'07예산	증감율
총 수입	235.3	250.5	6.4% 수준
- 예 산	155.8	166.6	6.9%
- 기 금	79.5	83.9	5.5%
총 지출	224.1	237.1	5.8%
- 예 산	153.7	164.2	6.9%
- 기 금	70.4	72.8	3.4%

② 재정수지

(조원, %)

	'06예산	'07예산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0.9 (△0.1)	13.4 (1.5)
관리대상수지(GDP대비, %)	△14.9(△1.7)	△13.6 (△1.5)
일반회계 국채	9.3	8.0

③ 분야별 지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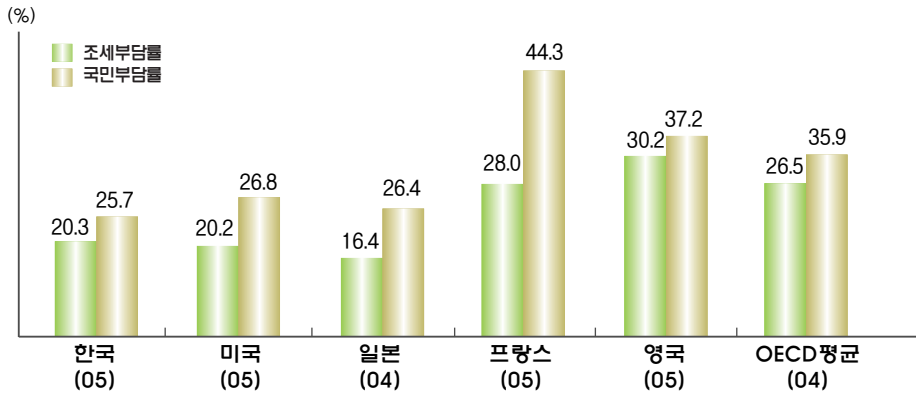
(조원, %)

구 분	'06	'07	증감액	증감률
1. 사회복지·보건	56.0	61.4	5.4	9.6
2. 교육	28.8	30.7	2.0	6.8
3. 수송·교통·지역개발	18.4	18.4	-	-
4. 농림·해양수산	15.5	15.9	0.4	2.6
5. 산업·중소기업	12.4	12.6	0.2	1.3
6. 환경보호	3.8	4.0	0.2	6.3
7. 문화·관광	2.8	2.9	0.1	4.3
8. 국방비	22.5	24.5	2.0	8.9
9. 공공질서·안전	11.0	10.9	△0.1	△1.3
10. 통일·외교	2.5	2.4	△0.1	△4.5
11. R&D	8.9	9.8	0.9	9.6
12. 국가균형발전	6.3	6.8	0.5	7.6
13. 정보화 및 통신	7.6	7.7	0.1	1.6

* 분야별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계 기준(기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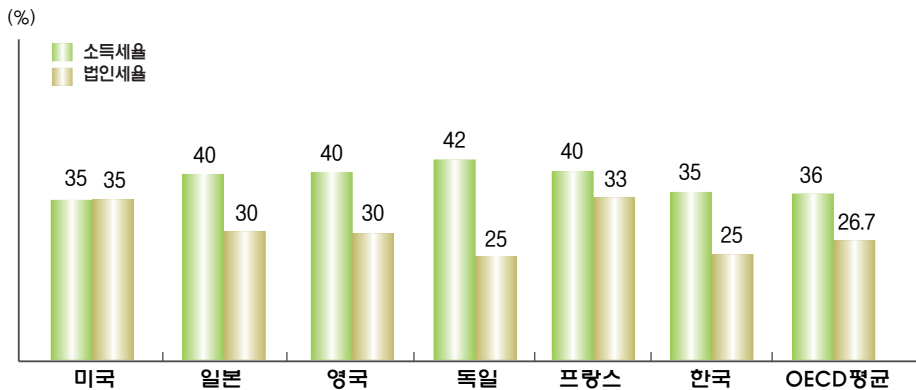
(3) 조 세

① 조세부담률 비교



* 조세부담률 : (국세+지방세)/GDP,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GDP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05년판)

② 소득세율, 법인세율 비교



* 미국은 뉴욕주 기준

(4)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구 분	02년 (A)	05년 (B)	06년 (C)	증감		07년 (전망)
				(C-B)	(C-A)	
국가채무 (GDP 대비, %)	133.6 (19.5)	248.0 (30.7)	283.5 (33.4) ¹⁾	35.5 (2.7%p)	149.9 (13.9%p)	301.1 (33.2)
• 금융성 채무 (GDP 대비, %)	91.1 (13.3)	147.1 (18.2)	163.6 (19.3)	16.5 (1.1%p)	72.5 (6%p)	173.3 (19.1)
• 적자성 채무 (GDP 대비, %)	42.5 (6.2)	100.9 (12.5)	119.9 (14.1)	9.7 (1.6%p)	77.4 (7.9%p)	127.8 (14.1)

국가채무 1,000조원설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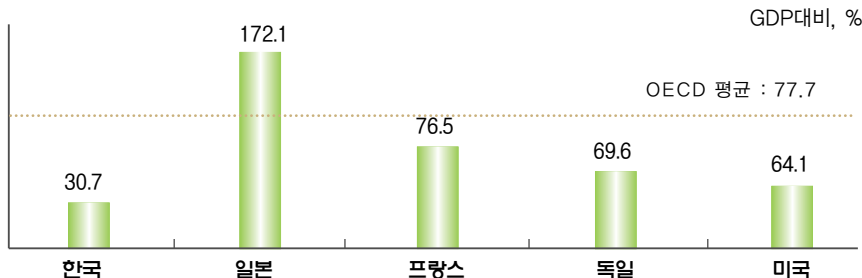
- ◆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국가채무에 보증채무, 통안증권, 공기업 채무 등도 포함된다는 견해로, 일반정부 부문의 확정채무만 국가채무로 인정하는 IMF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단위 : 조원)

구 분	2005	1,000조원설	IMF기준(정부통계)	비고
확정채무	248	포함	포함	-
보증채무	55	포함	불포함	우발채무
공기업채무	122	포함	불포함	비정부채무
사회보장성연금채무	490	포함	불포함	잠재채무
통안증권	155	포함	불포함	통화당국채무
합 계	1,088	약1,000	133.6	

참여정부는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재정파탄 ?

- ◆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절대 규모나 GDP 비중면에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05년 기준)



1. 사회복지

(1)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2001년 기준)

국 가	한 국	멕시코	미 국	일 본	영 국	프랑스	독 일	스웨덴	OECD 평균
GDP대비(%)	8.7	11.8	15.2	17.5	22.4	28.5	28.8	29.5	22.4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4.8.

* 사회복지지출(OECD) : 노령,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공복지지출과 법정 민간복지지출의 합계

(2)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수

구 분	'02	'03	'04	'05	'06
수급자수(천명)	1,353	1,377	1,425	1,515	1,535
인구대비 수급률(%)	2.8	2.9	3.0	3.1	3.2

* '07년 예산(2조 6,474억원) : 1,674천명(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외국인 배우자 신규 수급 등으로 확대)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 분	'03	'04	'05	'06	'07
1인가구(만원)	36	37	40	42	44
4인가구(만원)	102	106	114	117	121

(3) 4대 공적연금**일반현황 (2006.12월)**

구 분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도입연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관장기관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가입대상	18세~60세 국민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 교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가입자수	17,740천명	1,009천명	246천명	166천명
수급자수	1,859천명	236천명	25천명	68천명
지급시기	10년이상 가입, 60세 도달시	20년이상 가입, 퇴직시 (60세 또는 정년도달시)		19.5년이상 가입, 퇴직시
적립기금	182.2조	4.2조	8.4조	0.3조
보험료율	9%(직장인은 기업주가 50% 부담)	17% (채용주가 50% 부담)		
급여수준	60% (40년 가입, 생애평균소득기준)	76% (33년 가입, 최종 3년 보수기준)		

4대 공적연금 재정 전망

구 분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당년적자	2036년(예상)	1993년	2019년(예상)	1973년
기금고갈	2047년(예상)	2001년	2026년(예상)	1973년

공무원·군인연금 재정보전금 현황 및 전망

구 분	'05	'06	'07	'10
공무원 연금	0.6조	0.7조	1.0조	2.1조
군인 연금	0.9조	0.9조	1.0조	1.2조



사회 분야

2. 교육

(1) 각급 학교 현황 (200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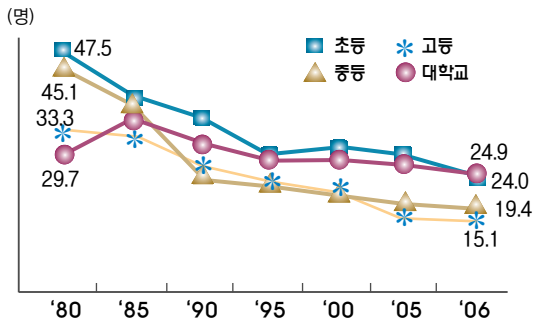
구분	학교 수(개)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유치원	8,290	545,812	32,096
초등학교	5,733	3,925,043	163,645
중학교	2,999	2,075,311	106,919
고등학교	2,144	1,775,857	117,933
전문대학	152	817,994	11,857
대학	200	2,094,752	54,833

* 대학은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학생수는 재적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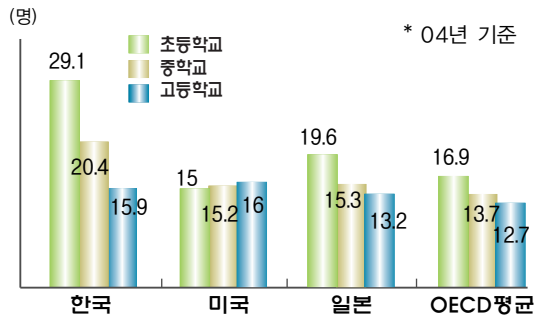
(2) 교원1인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



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



(3) 교육경쟁력

2006년도 IMD 교육경쟁력지수 (2006.5)

구 분	'05		'06		전년 대비
	현황	순위	현황	순위	
1.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4.0	46	4.0	48	2 ↓
2.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31.40	54	30.2	56	2 ↓
3.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18.40	45	17.8	41	4 ↑
4. 중등학교 취학률(%)	97.2	6	87.0	33	27 ↓
5.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41.0	4	47.0	4	-
6. PISA 성적('00) : 수학, 과학(점)	547/552	2/1	547/552	3/4	1/3 ↓
7. 15세 이상 문맹률(%)	2.1	33	2.1	34	1 ↓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4위), PISA성적(과학1위, 수학2위)은 세계적 수준

** GDP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48위), 대학교육(경쟁사회 요구 부합 여부, 50위) 등은 미진

*** '중등학교 취학률'이 대폭 하락한 이유는 '06년 IMD 오류로 우리나라가 제출한 순취학률 94%를 87%로 잘못 인용하였기 때문임

SCI 논문 국가 순위

구 분	문민정부(1997)	국민의정부(2002)	참여정부(2005)
순 위	18위	13위	12위
한 국	7,728편	14,916편	23,515편
세 계	745,891편	784,545편	1,011,363편

※ 출처 : 한국연구자의 2005년도 SCI 인용지수 분석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4) 대학 진학율

(단위 :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비 율	68.0	70.5	74.2	79.7	81.3	82.1	82.1

* 진학률 = (대학진학자수/고교졸업자수)×100, 교육통계분석자료집(2006, 한국교육개발원)

3. 노동

(1) 주요 고용지표

구 분	'03	'04	'05	'06
취업자수(천명)	22,139	22,557	22,856	23,151
고용률(%)	63.0(51.1)	63.6(52.2)	63.7(52.5)	63.8(53.1)
실업자수(천명)	818	860	887	827
청년실업자수(천명)	401	412	387	364
실업률(%)	3.6	3.7	3.7	3.5
청년실업률(%)	8.0	8.3	8.0	7.9
실업급여 수혜율(%)	19.0	23.7	27.3	31.7

※ 고용률 : 생산가능인구(15~64세)중 취업자수. () 여자
 ※ 주요국 고용률(05) : 스위스 77.2, 미국 71.5, 일본 69.3, OECD평균 65.5
 ※ 실업급여 수혜율 :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

(2) 최저임금 현황

구 분	'03.9~'04.8	'04.9~'05.8	'05.9~'06.12	'07.1~12
최저임금액(시간급)	2,510원	2,840원	3,100원	3,480원
수혜근로자수(천명)	1,035	1,245	1,503	1,784
영향률(%)	7.6	8.8	10.3	11.9

* 영향률 :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수) / (전체 근로자수)×100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고시

(3) 외국인력 현황

①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 현황('06.12)

구 분	계	단순기능인력	배우자	방문동거	유 학	기타
인원(명)	910,149	482,049	93,782	45,786	30,101	258,431
비율(%)	100	53.0	10.3	5.0	3.3	28.4

* 단순기능인력 중 합법체류자는 295,155명, 불법체류자는 186,894명
 * 기타는 전문인력·재외동포·사증면제관광·공무 등 포함

② 불법체류자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인원(명)	289,239	138,056	188,483	180,792	186,894

* 주요국 불법체류자('04년) : 미국 800만명, 독일 150만명, 일본 25만명, 대만 1.6만명
 * '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18.4만명 합법화

4. 여성 · 가족

(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구 분	'97	'00	'01	'03	'05	'06
15세이상여성인구(만명)	1,796	1,866	1,885	1,922	1,968	1,990
여성경제활동인구(만명)	893	910	929	941	986	1,000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8	48.8	49.3	49.0	50.1	50.3

(2) 육아 지원

시설별 이용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국공립	사립/민간	계
유치원	기관	4,460(53.8%)	3,830(46.2%)	8,290(100%)
	아동	121,324(22.2%)	424,488(77.8%)	545,812(100%)
보육시설	기관	1,507(5.2%)	27,254(94.8%)	28,761(100%)
	아동	112,746(11.2%)	894,096(88.8%)	1,006,842(100%)

* 여성가족부('06.6), 교육인적자원부('06.4)

보육시설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영 아	유 아
아동수(A)*	3,158,538	1,436,246	1,722,292
시설이용아동수(B)	1,006,842	305,555	701,287
보육률(B/A)	31.9	21.3	40.7

* 아동수 2005년 기준(영아 : 0~만2세 아동, 유아 : 만3~만5세)

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차등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료	장애아아동지원
아동수	636,801	427,645	57,644	136,726	14,786
(%)	(100)	(67.2)	(9.0)	(21.5)	(2.3)

※ 여성가족부(보육통계,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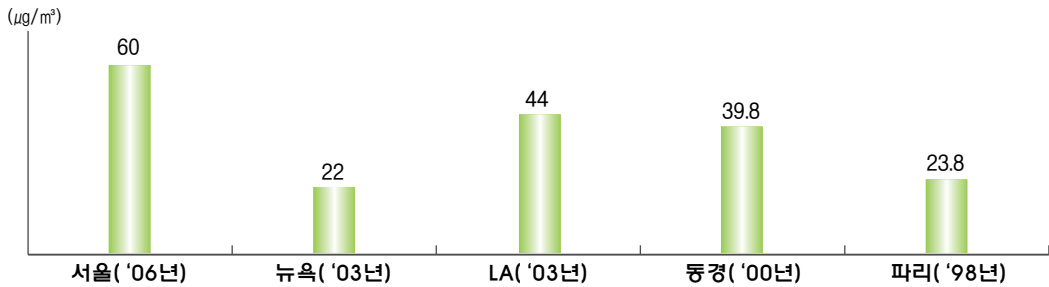
5. 환경

(1) 환경지수(ESI, EPI) 국가순위

구 분	한국	핀란드	뉴질랜드	일본	미국	벨기에	중국
'05 ESI(146개국)	122	1	14	30	45	112	133
'06 EPI(133개국)	42	3	1	14	28	39	94

* 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 환경지속성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환경성과지수)

(2) 세계 주요도시 미세먼지 농도



6. 문화 · 관광

(1) 문화산업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00	'01	'02	'03	'04	'05
매출액 (GDP대비)	20.69 (3.6)	23.16 (3.7)	29.63 (4.3)	44.19 (6.1)	50.06 (6.4)	53.95 (10.6)

(2) 관광객 추이 등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외래관광객(만명)	532	515	535	475	582	602	615
국민해외여행(만명)	550	600	712	709	882	1,007	1,161
관광수입(억불)	68	64	59	53	60	56	53
관광지출(억불)	62	65	90	82	98	119	138
관광수지(억불)	6	-1	-31	-29	-38	-63	-85

※ 사행산업 및 사행성 게임 관련

사행산업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수 량	이용고객(06년, 추정)
복 권	12종(온라인 · 인쇄 · 전자)	-
카지노	외국인대상 16개소, 내국인대상 1개소(강원랜드)	278만명, 강원랜드 179만명
경 료	3개소(광명 · 창원 · 부산), 장외 19개소	561만명
경 정	1개소(미사리), 장외 12개소	196만명
경 마	3개소(과천 · 제주 · 부산), 장외 32개소	1,945만명
스포츠토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씨름, 골프	-
사행성게임	사행성게임장 11,196개(06.9) → 1500개(07.1) 사행성PC방 5,289개(06.9) → 100여개(07.1)	-

사행산업 매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추정)
복 권	9,796	42,299	34,596	28,331	25,940
카지노	8,777	10,545	11,702	12,448	12,830
경 료	29,999	24,106	19,426	17,556	15,859
경 정	1,223	3,266	3,378	4,127	3,971
경 마	76,491	61,753	53,303	51,548	53,109
스포츠토토	220	283	1,389	4,573	9,130
소 계	126,506	142,252	123,794	118,583	120,839

사행성게임단속실적 ('05.11~07.1.10)

- 사행성게임장 · PC방 54,285건 단속, 85,490명 입건, 3,884명 구속
- 게임기 · PC 23,004대 압수, 추진보전청구 1,799여억원
- 사행성게임기 제조업체 등 59개 업체 세무조사 274억원 추정
- 불법광고물 등 11,205건 단속

1. 남북 관계

(1) 북한의 인구 및 경제규모

(2004년 기준)

구 분	북 한	남 한
인 구 (만명)	2,271	4,808
경제성장률(%)	2.2	4.6
명목 GNI(억불)	208	6,810
1인당 GNI(불)	914	14,162

(2) 금강산 관광 관련 (최근 5년간)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연 도	'02	'03	'04	'05	'06.9	합 계
관광객수	84,727	74,334	268,420	298,247	194,715	920,443

관광대가 지급현황

(단위 : 만불)

연 도	'02	'03	'04	'05	'06.9	합 계
관광대가	2,150	1,313	1,525	1,348	1,007	7,343

(3) 대북 식량지원 현황

구 분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원실적(만톤)	15	70	40	40	40	50	10
억 원	1,854	1,057	1,510	1,510	1,359	1,787	400

(4) 남북경협기금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인도적사업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소 계
'98	199	-	675	874
'99	339	4	-	343
'00	1,845	52	151	2,048
'01	1,166	17	1,359	2,542
'02	2,193	257	1,035	3,485
'03	3,062	48	1,310	4,420
'04	2,245	74	1,574	3,893
'05	3,659	245	2,631	6,535
'06.9	1,684	206	1,336	3,226
총계	16,392	903	10,071	27,366

(5) 남북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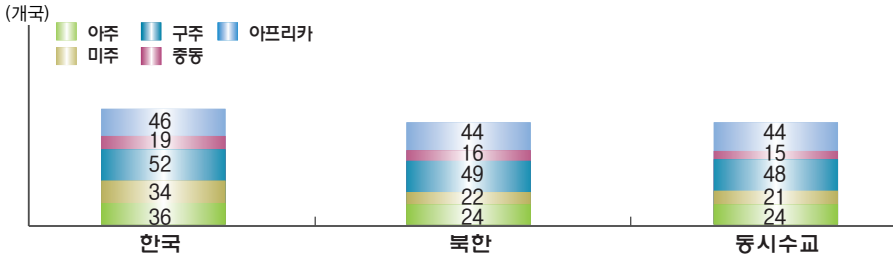
(단위 : 천불)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반입	반출	교역수지	반입	반출	교역수지
1998	50,787	21,914	-28,873	41,317	29,617	-11,700
1999	67,746	21,670	-46,076	53,736	45,883	-7,853
2000	78,551	31,978	-46,573	71,966	57,224	-14,742
2001	100,897	10,492	-90,405	72,579	52,345	-20,234
2002	167,400	4,382	-163,018	102,789	68,388	-34,401
2003	177,443	46,227	-131,216	111,639	73,370	-38,269
2004	150,117	21,208	-128,909	107,746	68,213	-39,533
2005	188,916	20,862	-168,054	131,226	78,503	-52,723
합계			-803,124			-219,455

* 대북 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

2.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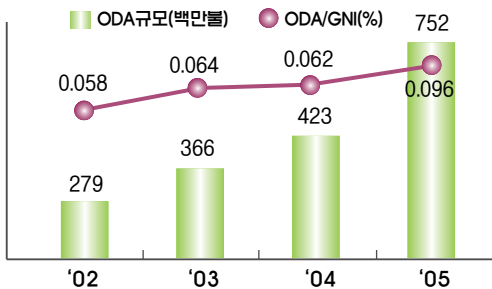
(1) 수교국 현황



(2) ODA 원조 규모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GNI대비 비율은 0.096%('05기준)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0.33%의 1/3.4수준이며,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0.82%), 호주(0.25%), 및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0.21%), 뉴질랜드(0.27%)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

ODA 추이



GNI 대비 ODA 규모 비교



(3)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분쟁 추이

	전반기('95~'99)	후반기('00~현재)
피소	9건	2건
제소	3건	10건

3. 국 방

(1) 전체예산대비 국방비 증가율 (2006~2020년중 국방개혁 소요)

(단위:조원)

기 간	'06~'10	'11~'15	'16~'20	합 계
국방비 계 (증가율)	139.3 (9.9%)	216.1 (7.8%)	265.9 (1.0%)	621.4
*국방비/재정규모	16.8%	17.9%	16.3%	16.8%
*국방비/GDP	2.72%	2.97%	2.75%	2.8%
· 병력운영비	60.3	79.2	102.6	242.2
· 전력유지비	28.8	37.2	41.6	107.6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50.2 (15.7%)	99.7 (12.3%)	121.7 (△4.3%)	271.5

(2)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계	68만 1천여명	118만여명
	육 군	54만 8천여명	101만여명
	해 군	6만 8천여명	6만여명
	공 군	6만 5천여명	11만여명
예비 전력(병력)		304만여명	770만여명

(3) 한미 방위비 분담 현황

(단위:억불)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분담금 합의규모	3.30	3.63	3.14	3.39	3.90	4.44	4.72	5.57	6.22	6.80	6.80

* 총 주둔비 대비 분담률 : (한국) 40%, (일본) 74.5%, (독일), 32.6% ('02년 기준)

GDP 분담률 : (한국) 0.16%, (일본) 0.10%, (독일) 0.06% ('0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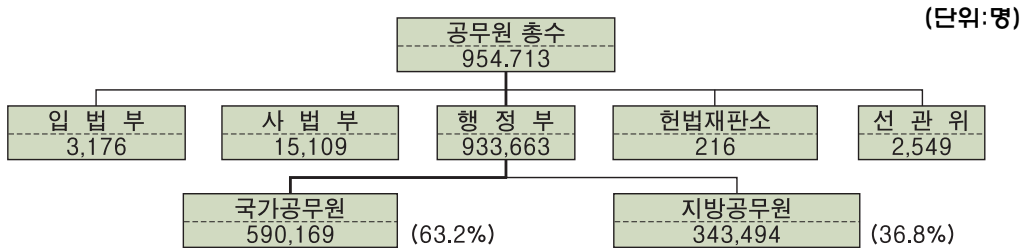
(독일의 분담률은 우리보다 낮으나, NATO 공동비용 분담을 위해 2.4억불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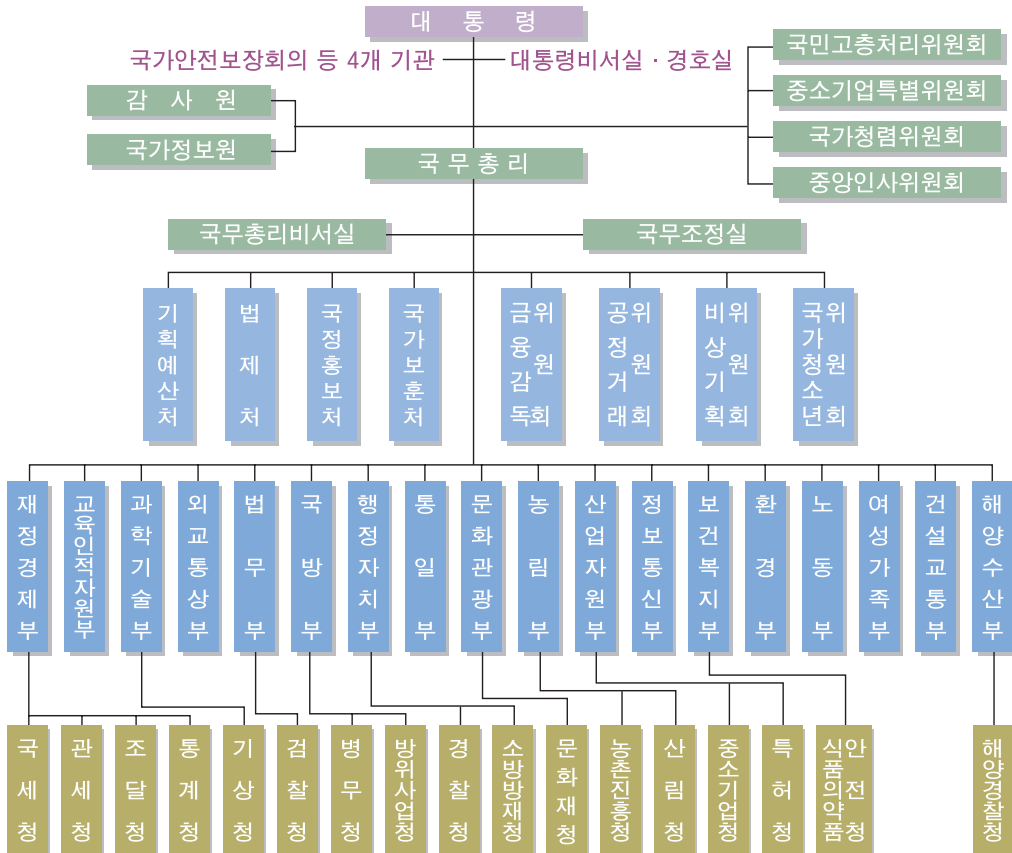
정부 · 일반행정 분야

1. 정부조직 일반

총 공무원수 : 954,713명 ('06.12.31. 현재)



◆ 정부조직 : 18부 4처 17청('06.12.31 현재) (지방직은 '06.6월 자료임)



2. 공무원

(1) 정무직 변동 추이

[연도별 ·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무직 변동 내역('06.12.31현재)]

(단위 : 명)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정무직	120	116	113	100	100	101	89	93	98	103	106	115	119	131	136

[증감 사유별 현황 : 순증 30(+35, △5)]

구분	기관명	기관명	인원
장 관 급 (+7)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국가안보보좌관 신설	+2
	법제 · 국가보훈처	차관급 기구에서 장관급 기구로 격상	+2
	과학기술자문회의	기존 장관급 의장 폐지(의장 : 대통령)	△1
	의문사위원회	기관 폐지(위원장 : 장관급)	△1
	반민족행위진상위	위원장을 장관급(←비상임)으로 조정	+1
	국민고충처리위	위원장을 장관급(←비상임)으로 조정	+1
	과거사정리위	장관급 신설(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
	군외문사진상규명위	장관급 신설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장관급 신설	+1
	차 관 급 (+23)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증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직급(1급→차관급)	+1
국무조정실		총괄 · 사회문화조정관→기획수석 · 사회수석조정관	+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신설	+1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 격상(1급 차관급)	+1
소방방재청		기구 신설	+1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1인 증설(차관급)	+1
철도청		공사화	△1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격상(1급→차관급)	+1
반민족행위진상위		상임위원 1인을 차관급으로 신설	+1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단수직화(정무 또는 외무→외무)	△1
복수차관 도입		외교 · 재경 · 행자 및 산자부	+4
문화재 · 통계 · 기상청		문화재 · 통계 · 기상청장 격상(1급→차관급)	+3
국민고충처리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1급→차관급)	+1
과거사정리위		상임위원(차관급) 3인 신설	+3
방위사업청		차관급 신설	+1
행복도시 건설청		차관급 신설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상임위원	+2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폐지	△1

* (국무조정실) 2003. 6월 총괄 · 사회문화조정관(1급)을 기획수석 · 사회수석조정관(차관급)으로 격상하였고, 2005. 5월 차장제(기획차장 · 정책차장)로 변경



정부 · 일반행정 분야

(2) 역대 정부별 공무원수 변동 ('06.12.31. 현재)

(단위 : 명)

연도	제3공 ('61~'72)	제4공 ('73~'80)	제5공 ('81~'87)	제6공 ('88~'92)	문민정부 ('93~'97)	국민의정부 ('98~'03.2)	참여정부 ('03.3~'06.12)
국 가	362,396	438,454	477,146	565,115	561,952	576,223	590,169
지 방	71,019	150,566	222,049	310,957	357,452	308,941	343,494
계	433,415	589,020	699,195	876,072	919,404	885,164	933,663
증 감 (연평균 증감율)	199,198 (+7.1%)	155,605 (+4.5%)	110,175 (+2.5%)	176,877 (+5.1%)	43,332 (+1.0%)	△34,240 (△0.7%)	48,499 (+1.2%)

* 참여정부 공무원 증원 : 국가 공무원 13,946명 + 지방 공무원 34,553명
 ** 국가 공무원은 철도공사 감축인력(29,756명) 감안시 실제 43,702명 증원

[참여정부 4년간('03~'06년) 부처별 증원인원 (상위 10개 기관)]

순서	기관명	증원인원	증감율	순서	기관명	증원인원	증감율
1	교육인적자원부	36,384*	11.7%	6	노동부	1,474	53.8%
2	경찰청	3,869	4.0%	7	국세청	1,204	7.1%
3	정보통신부	2,891	9.5%	8	검찰청	865	10.5%
4	법무부	1,895	11.7%	9	방위사업청	807	100.0%
5	해양경찰청	1,674	31.8%	10	건설교통부	706	20.5%

* 참여정부 출범전 '03.1~2월 사이 약 14,000명의 교원 증원

[참여정부 4년간('03~'06년) 부처별 증원율 (상위 10개 기관)]

순서	기관명	증원인원	증감율	순서	기관명	증원인원	증감율
1	중앙인사위 ¹⁾	330	397.6%	6	노동부	1,474	53.8%
2	국민고충위	173	190.1%	7	국가청렴위	66	47.5%
3	청소년보호위	84	182.6%	8	여성부	56	46.7%
4	국무조정실	122	77.2%	9	특허청	476	45.7%
5	식품의약청	562	68.8%	10	법제처	54	34.8%

* 신설기관(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등) 제외

* 1) 중앙인사위는 인사기능 통합(2004)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인력, 기구를 이관받음.

(3) OECD 국가 공무원수 비교 (공무원 : 국가+지방+공공기관)

국 가	인구(천명)	공무원수 (명, 기준년도)	공무원1인당 인수(명)	인구천명당 공무원수(명)
한 국	48,082	1,161,025('05년)	41.4	24.1
일 본	126,926	4,176,432('00년)	30.4	32.9
독 일	82,188	4,347,300('00년)	18.9	52.9
뉴질랜드	3,873	220,170('00년)	17.6	56.8
미 국	282,425	18,442,558('00년)	15.3	65.3
프랑스	60,594	4,447,037('99년)	13.6	73.4
영 국	59,778	4,485,000('05년)	13.3	75.0

* 공무원 수 : OECD 「Highlights of Public Sector Pay and Employment Trends」 (2002)
- 일본은 총무성 [일본통계연감], 영국은 통계청 자료 참조

※ 참여정부 공무원 증원 논란 관련**① 참여정부 인력 증원은 대부분 대민서비스 분야**

참여정부 4년간('03~'06) 국가공무원 증원 비중

계	교원	경찰	집배원	교정	고용지원	재난안전	기타
100%	51.6%	12.9%	6.2%	4.1%	2.3%	2.1%	20.8%

* 지방공무원 증원(34,553명)도 사회복지·소방·재난대책 인력이 대부분

② 역대 정부 증원 추세 비교

참여정부 기간 동안 연평균 공무원 증가율 1.2%는 문민정부(1.0%)와 유사하며, 국민의 정부($\Delta 0.7%$) 보다는 높으나, 이진정부(제5공 2.5%, 제6공 5.1%)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